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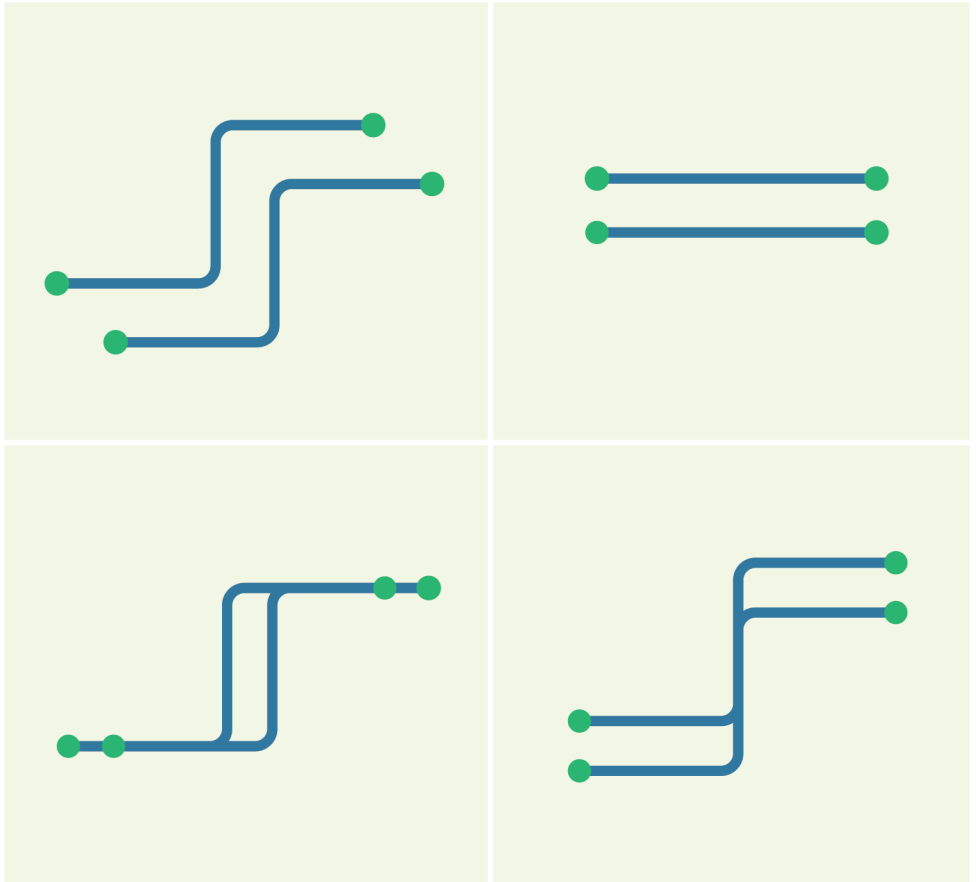
함께 갈 수 없나요?

활력향연

09

: 2030 활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활동

_차미리, 최슬기





커피 한잔할래요?

차미리, 최슬기 _ m.cha@nKHR.or.kr / s.choi@nKHR.or.kr

연구자들은 (사)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미리 연구원은 8년째, 최슬기 연구원은 3년째, 북한출신 청소년·청년들과 지지고 볶는 중이며, 북한인권 활동가이자 교육자로서 통일과정과 후에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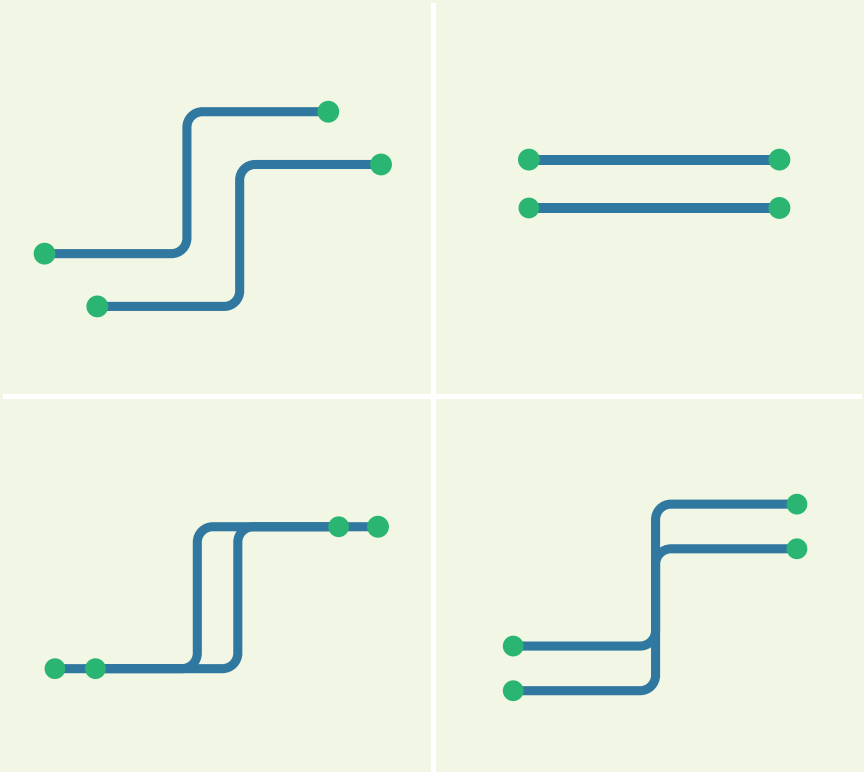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 '인권', '대북지원'... 어렵고 크게만 느껴졌던 주제들을 일상에서 커피 한잔하며 풀어내보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할래요?

이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결과물로서 서울시NPO 지원센터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갈 수 없나요?

: 2030활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활동

활력향연 09



2021년 11월 | 커피 한잔할래요? - 차미리, 최슬기

함께 갈 수 없나요?

: 2030활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활동

프롤로그 : 아, 궁금하다 7

1장. 발자취 돌아보기

: 북한인권·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큰 흐름과 지향점 11

1. 국내 북한인권 분야의 흐름 12

1) 북한인권 운동의 시작과 발전 13

- (1) 북한인권 운동의 시작 : 1990년대 후반 14
- (2) 북한인권 운동의 확산기 : 2000년대 초반 ~ 2010년대 초반 15
- (3) 북한인권 운동의 성숙기 : 2010년대 중후반 이후 ~ 현재 17

2) 북한인권 단체의 주요 활동 및 성과 18

- (1) 연구와 기록 활동 18
- (2) 인식개선 19
- (3) 국제 연대 활동 20
- (4) 시민교육 활동 21

2. 국내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흐름 22

1)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의 시작과 발전 22

- (1) 대북 인도적지원의 시작 : 1990년대 초 22
- (2) 대북 인도적지원의 확산 및 성숙기 : 1990년대 후반 ~ 2010년 24
- (3) 대북 인도적지원의 침체기 : 2010년대 초반 이후 ~ 현재 25

2)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의 주요 활동 및 성과 26

- (1) 일반 및 긴급구호 29
- (2) 농축산 29
- (3) 보건의료 30
- (4) 취약계층(우선복지) 30
- (5) 사회인프라 31

3. 각 분야의 지향점 33

- 1) 인권의 시작 : 세계인권선언문 33
- 2) 북한인권 분야의 지향점 38
 - (1) 인권의 보편성 38
 - (2) 유엔 인권규약 40
 - (3) 북한 정권 책임론 42
- 3)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지향점 44
 - (1) 민족주의 45
 - (2) 유엔 인권규약과 SDGs 46
 - (3) 북한과 협력관계 49

4. 소결 51

2장. 우리 안의 같음과 다름

: 북한인권·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의 이야기 55

1. 이런 사람이 참여했어요 56

2. 우리는 이런 사람이예요 58

- 1)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 해당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58
- 2) 활동가로서 자신 : 활동하면서 고민되는 점, 동기 부여·저하 되는 점 62

3. 우리의 같음과 다름 67

- 1) 인권에 관한 인식 67
- 2) 북한 정권과 주민에 관한 인식 71
- 3) 북한인권 인식 74
- 4) 대북정책 인식 78
 - (1)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협력적 접근과 북한인권 78
 - (2) 대북제재, 북한 정권 압박 접근과 북한인권 81
 - (3) 국제인권규약 인식(자유권, 사회권) 84

4. 우리 안의 같음과 다름 88

- 1) 우리의 같음 88
- 2) 우리의 다름 89

3장. 앞으로의 우리는?

: 북한인권·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의 미래 그려보기 93

1. 우리의 역할 : 변화를 이끌어내는 Change Maker 95
2. 북한인권·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정말 협력 가능할까요? 99
3. 두 분야 활동가들의 첫 만남, 그리고 가능성 103

에필로그 : 이제 만나러 갑니다!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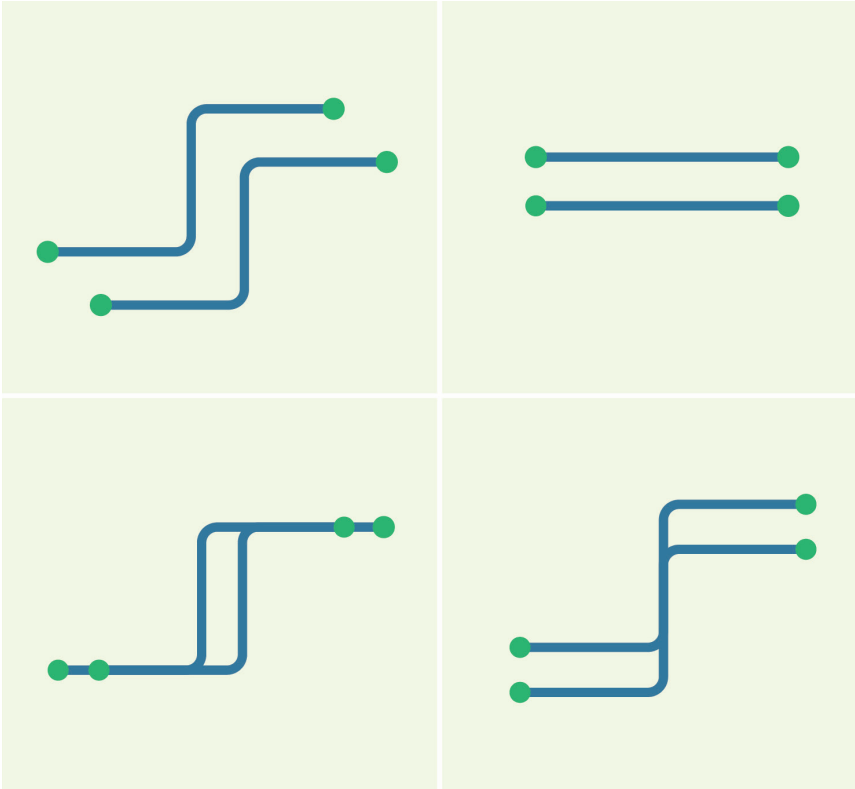
참고문헌 112

<표 차례>

- <표 1>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지원대상자 및 분야별 특징 27
- <표 2>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대형 민간단체 32
- <표 3> 자유권규약의 주요 내용 35
- <표 4> 사회권규약의 주요 내용 35
- <표 5> 북한인권 단체 보고서 목록과 자유권규약 41
- <표 6>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 활동과 사회권규약 47
- <표 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 권리 48
- <표 8>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차이점 51
- <표 9> 심층 인터뷰 참여자 정보 57
- <표 10> 우리의 다름 89

<그림 차례>

- [그림 1] 1995~2015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별 비중 표 28
- [그림 2] 북한인권정보센터 미션 중 일부 43



왼쪽 위부터 평행으로 가는 모습, 정면에서 본 모습, 옆면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하나의 그래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표지 디자이너 한지연의 글

이 연구의 주안점은 시각의 다각화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단체와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 사이의 다른 세계관에 의한 갈등 때문에 두 분야는 평행한 관계처럼 보여지나, 이 연구의 목표는 다양한 시각으로 서로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접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연구가 갈등 해소를 너무 진지하고 크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단순하고 심플한 그래픽을 만들어보았습니다.

프롤로그 : 아, 궁금하다

우리 연구진은 현재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에서 활동하며 북한출신 청소년·청년 교육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가 북한이 고향인 친구들과 만나 지지고 볶는 활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의 고향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쌤들! 나중에 통일되면 제 고향에 한 번 놀러오세요! 제가 동네랑 장마당 구경도 시켜드리고 진짜 맛있는 인조고기밥이랑 옥수수 국수 말아 드릴게요.

저는 탈북하는 도중에 부모님이 공안에 걸리셨어요. 그때 저만 혼자 계속 이동하느냐, 엄마 아빠 찾기 위해 (중국에) 남느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진짜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정말 안 당해 보면 그 마음 모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들이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자리 잡는 과정에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듣기도 하고 고향의 재미난 에피소드, 한국에서 겪은 행복한 경험을 듣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북한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그리워하는 고향과 가족,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북한과 편하게 왕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거나 종교 도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등 개인의 자유가 지켜지지 못하는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과 남과 북의 헤어진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평화로운 교류를 그리려는 마음은 저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정치적 ‘보수’로, 북한과 신뢰 관계를 쌓고 협력적인 관계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정치적 ‘진보’로 여겨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두 가지 고민은 마치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입장은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야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시민단체들 사이 협력의 시도가 몇 번 있었다고 지나가듯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저희가 활동하면서 두 분야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분야 모두 북한 주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을 텐데, 왜 시민단체 차원에서 협력할 수 없었는지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우리 안의 질문 버튼이 한 번 눌러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진짜 그럴까?’, ‘정말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로 서로 다를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다르다고 여겨지는 걸까?’, ‘만약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고 같다면 무엇이 같을까?’, ‘다르더라도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같으면 더 좋고.’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질문을 하던 당시에 우리 안에는 답이 없었기에 ‘그래, 일단 한번 만나보자!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연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주로 정치적으로 다뤄지는 ‘북한’, ‘인권’, ‘대북지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거대 담론이 아닌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2030세대의 활동가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듯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팀 이름도 ‘커피 한잔할래요?’로 정했습니다. 두 분야를 일궈낸 선배들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냉전체제 아래 자랐지만, 2030세대 활동가들은 평화·통일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점에

서 선배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30세대가 이제 두 분야를 이끌어갈 세대라는 점에서 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연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졌던 질문을 하나씩 해결해 가며 연구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시민단체의 발전 과정과 주요 활동을 살펴보려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각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장에서는 각 분야의 활동가들을 만나 1:1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다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북한’과 ‘인권’ 그리고 ‘대북 인도적지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에 참여해 준 활동가 모두가 모여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던 흔적을 독자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도 고민됩니다. 너무 ‘큰 놈’을 건드려 버린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괜히 만났다가 싸움만 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두 분야의 활동가들이 함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기는 이번 연구가 우리 사회 속 만연한 갈등 중 하나를 해소하는 작은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커피 한잔하실래요?



1장. 발자취 돌아보기

: 북한인권·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큰 흐름과 지향점

이 연구의 목적은 두 분야의 같음과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의 시도를 해보는 것, 정치적 담론에서 논의되던 ‘북한’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활동가 개인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두 분야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분야가 어떤 배경에서 발전해 왔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국내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가 왜, 무슨 사건을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흐름을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훑어보며, 각 분야에서 추구해 온 지향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번 장은 이후 만나게 될 활동가들이 지니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 안의 같음과 다름을 먼저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은 대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연이어 겪으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연이은 자연재해와 경제난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을 불러일으켰으며 아사자만 30만~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량의 기아 사태로 이어졌다. 북한 내부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자 북한이 1995년 8월 뉴욕주재 북한유엔대표부를 통해 긴급지원을 요청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늘어난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북한의 내부 상황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시기와 맞물려 국내에서 민간단체가 활발히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각 분야의 수많은 민간단체가 1995~9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두 분야의 활동 흐름, 그리고 각 분야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1. 국내 북한인권 분야의 흐름

+ 북한인권 운동이란?

본 연구에서 말하는 북한인권 운동이란 정치범수용소, 고문 및 폭행, 아동과 여성의 인권침해, 탈북자 문제 등과 같이 북한의 정치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 단체, 국가기구에 의해 진행되는 연구, 캠페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1) 북한인권 운동의 시작과 발전

현재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은 세계적으로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이 처음부터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인권문제는 국제단체의 이슈화 단계와 각국 정부의 논의 단계, 그리고 국제기구의 개입 단계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7:131). 북한인권 문제 역시 국내외 단체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설정될 수 있었다.

국제단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및 옹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냈으며,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내 단체는 북한과 같은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 북한 사회를 경험한 탈북민의 꾸준한 입국으로 북한인권 실상에 관한 정보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국내 단체는 국제 사회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국내 북한인권단체 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 대다수의 단체가 국내보다는 국제 활동에 무게를 두고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 움직임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국내 활동은 남북관계에 따른 정책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장에서는 북한인권 운동에 있어 국내 주요 단체들이 탄생하게 된 흐름과 주요 활동을 짚어보며 시민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 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아본다.

(1) 북한인권 운동의 시작 : 1990년대 후반

북한인권 운동은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북한인권 관련 국내 단체는 남한 민주화투쟁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북한인권 운동은 정치적 보수 진영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국내 북한인권 단체의 첫 출발은 ‘비정치’를 선언한 순수 인권운동이었다(이준태, 2015:46).

국내에서 처음 출범한 북한인권 단체는 1996년 설립된 ‘북한인권시민연합’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초기 설립자는 ‘윤현’으로, 그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를 설립을 주도하여 당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인권운동가였다. 초기 창립 멤버 역시 윤현과 함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설립에 참여하고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그 당시 북한인권 문제가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앞장섰다. 단체가 설립된 1996년부터 북한인권 전문 계간지 「생명과인권」을 한·영·일 3개 국어로 발간해 국제사회에 배부하고 시민단체로서는 최초로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유엔과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국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같은 활동의 결과로 북한인권 문제는 점차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국제적 관심을 바탕으로 다수의 북한인권단체가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활동해 온 인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찾대로 남쪽도 재고 북쪽도 재자는 것입니다. 인류 보편의 인권은 보수나 우익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인권운동은 시민운동이고 평화운동이자 국제운동이지, 북한 정권을 타도하려는 정치적 운동이나 내정간섭이 아닙니다. - 신동아 2007. 윤현 이사장 인터뷰 중 일부 발췌

(2) 북한인권 운동의 확산기 : 2000년대 초반 ~ 2010년대 초반

북한인권 운동은 2000년대 초반 확대된 국제사회의 관심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바탕으로 참여 주체의 다양화, 활동 영역의 분업 및 전문화를 거치며 점차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국내 북한인권 단체가 설립되었다.

① 참여 주체의 다양화

먼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북한인권 운동의 참여 주체가 주사파 출신 전향자,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가족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사파 출신 북한인권 민간단체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 1999년 12월 설립)’로 북한의 혁명노선과 주체사상을 따르며 학생운동을 이끌던 인물들이 전향해 설립하였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 “나라 안팎의 양심과 연대하여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민중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명시하고 북한의 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다른 새로운 운동 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이전까지 북한이탈주민은 기존 인권단체의 창립멤버 또는 국제회의 등의 주요 증언자 역할로만 참여하였으나, 2000년 이후 북한인권 단체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했다. 정치범수용소 출신을 중심으로 ‘북한민주화운동본부(2003년 설립, 이후 NK Watch로 변경)’, 북한출신 청년을 주축으로 ‘NAUH(2010년 설립)’ 등의 새로운 단체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북한사회를 경험한 증언자인 북한이탈주민이 활동가로서 활발하게 참여하여 북한인권 단체의 활동에 신뢰성을 더하게 되었다.

6.25전쟁 납북 피해자 역시 북한인권 운동의 주체로 등장한다. 이들 단체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단체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또 다른 주체로 활동하며, 북한 정권에서 진행한 납북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

구하고 국내외 캠페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주요 단체로는 1951년 설립 이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6.25사변납북자가족회(현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2001년 설립)’ 등이 있다.

② 활동 영역의 다양화 및 전문화

2000년대 초반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함께 북한인권 운동 주제가 세분화되며 기존의 활동이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 첫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창립 멤버 중 일부가 분리되어 북한인권 침해실태 기록과 조사연구를 전문화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2003년 설립)’가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내 북한이탈주민 전수 인권조사를 시작으로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기록, 인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활동이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경우 대북정보자유화 사업을 진행하여 북한전문 인터넷 뉴스인 ‘Daily NK’를 설립하였고, 북한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등 대북방송 단체를 양산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북한인권국제영화제’를 개최하여 북한인권을 문화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국제캠페인 활동 및 연구 활동도 보다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자들이 설립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북한 내부의 정치탄압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을 조사하고 알리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북한출신 청년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NAUH는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 남한출신

과 북한출신 청년, 해외 청년을 함께 연결하는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다.

북한인권 운동의 국내 창립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도 기존에 진행하던 ‘북한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를 계속하며 국제단체, 국제 주요 인사들과 관계를 확장하는 한편, 북한 여성인권 실태, 아동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북한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겨레계절학교’를 진행하며 국내 북한출신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해외 북한난민 구호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해외 거주 중인 북한 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활동, 강제 복송되는 북한 난민을 위한 국제 캠페인 활동, 국내 모금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3) 북한인권 운동의 성숙기: 2010년대 중후반 이후 ~ 현재

2000년대 초중반 활발한 국제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된 이후 2010년대 중후반에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발족 등 국제적 성과가 나타났다(뉴시스, 2013; 통일연구원, 2017:53).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11년만인 2016년에 통과되었다(연합뉴스, 2016). 이처럼 북한인권 상황에 국제적 관심과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은 1981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 따라 정기보고서를 16년 만인 2000년에 제출하였으며,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 2019년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중앙일보, 2021).

이상의 성과를 거둔 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한인권 단체들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기존의 연구 주제를 심화하여 단체별 역량

을 성숙시키는 단계에 접어든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의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는 한편, 북한인권과 탈북민 문제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지속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제도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이 2010년 후반 들어 관심을 보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점으로 인권 문제와 연관성을 연구하는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연구주제를 심화하여 피랍자, 군인인권, 장애인인권 등에 관해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 북한인권 단체의 주요 활동 및 성과

앞서 살펴본 북한인권 단체의 주요 활동은 ‘연구와 기록’, ‘인식개선’, ‘국제 연대’, ‘시민교육’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중 가장 큰 공통점을 보이는 것은 ‘국제 연대’와 ‘연구와 기록’으로 북한인권 단체들은 북한 내부의 인권 실상을 조사·기록하여 이를 국제 연대 활동에 적극 활용해 왔다. 앞서 살펴보았듯 대다수의 단체가 국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인권레¹·삼² 속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유엔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 장에서는 북한인권단체 활동의 전반을 살펴보며, 특히 국제 연대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가지적으로 드러난 성과를 알아본다.

(1) 연구와 기록 활동

연구와 기록 활동은 대다수의 북한인권 단체의 핵심 활동 중 하나이다. 북한인권 관련 연구는 1990년대 전후에 일부 민간단체와 소수의 연

1 국제인권레짐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에 관한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을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약 80여 개의 국제조약 등이 국제인권레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정천구, 2005:264).

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규모와 수준이 제한적이었고 당시 북한과 체제 대결 속에서 이뤄진 연구였기에 보고서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다(국가인권위원회, 2007:134). 이후 1990년대 후반 북한인권 단체가 생겨나고 이들이 정치범수용소, 북한 아동·여성 인권실태, 고문실태 등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함에 따라 북한인권보고서의 발간량이 증가하였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과 심층면담을 하면서 주로 북한 내부 인권상황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외 국내외 단체들 간 협업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연구 및 인권침해 실태 기록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발행하는 북한인권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다. 각 단체는 연구 결과를 활용해 유엔과 각국에 로비활동을 진행하며 국내외 단체와 연대 활동을 진행한다. 이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조사 보고서 등 국제 선언문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

연구 활동의 실례로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북한의 고문실태에 관해 영문으로 발간한 ‘North Korea: Republic of Torture(2007)’를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제공되어 제62차 유엔총회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북한인권실태조사 자료 유형 분석 및 분류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제출되었다. 또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해 2020년 기준 약 7만 명의 북한인권 피해 사례를 기록하였다.

(2) 인식개선

북한인권 단체들은 미술전시회, 음악콘서트, 영화제, 계간지 발행 등 홍보·캠페인 활동을 통해 국내외 시민과 소통하고, 일반 시민에게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경우 ‘뷰티풀 드림 콘서트’를 2007년부터 시작해 북한출신 청소년을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하였고, ‘꽃제비 날다’, ‘판옵티콘을 넘어서’ 등 북한출신 작가와 함께 북한인권을 알리기 위한 미술전시회도 개최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인권국제영화제를 10회째 개최했다. 이 같은 활동은 국내외 주요 언론사(BBC, CNN, Guardian, NY Times,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에 소개되며 북한인권 상황을 일반 시민사회에까지 확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3) 국제 연대 활동

거의 모든 국내 단체는 국제단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국가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옹호활동(advocacy)을 전개하여 각국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제인권레짐 차원에서 북한인권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국제회의를 주도한 첫 단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으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였다. 시민연합은 제1, 2회 국제회의를 통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결성, 미국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창설, 제5회 국제회의를 통해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제안 및 수용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프리덤하우스의 후원으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하였고, NK Watch는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북한인권 단체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4) 시민교육 활동

북한인권 단체는 국제적으로 로비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국내 북한인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 북한이탈주민이 대거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정책이 미흡했을 때, 국내 단체가 주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하나원 내 청소년 교육기관인 ‘하나둘학교’의 설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교육활동 중 북한출신 청소년교육은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하나둘학교 설립 초기부터 하나원 토요방문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 입국한 북한출신 청소년의 기초학습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년 단기 계절 학습캠프, 남·북한출신 대학생 토론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1년부터 북한인권아카데미, 통일외교아카데미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인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NAUH의 경우,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 국내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흐름

+ 대북 인도적지원이란?

이 연구에서 말하는 대북 인도적지원이란 민족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동포 사이의 인도적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따라 대북 인도적지원의 흐름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정치적인 내용은 최대한 제외하고 민간단체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초기 대북 인도적지원은 긴급구호의 성격을 강하게 보였지만 이후 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협력, 개발과 더불어 인도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로 명시하고자 한다.

민간단체에서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총 7,445억 원에 달하는 물자를 북한에 지원했다. 이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된 물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민간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을 받거나 기업 또는 개인 후원 등을 통해 이루어진 지원금액이다. 통일부에서 지정한 대북지원 지정단체는 총 145개 단체로 지난 26년 동안 식료품, 의류, 의약품, 긴급구호 키트, 악기, 종자, 공장설립,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도적지원이 이루어졌던 일반 및 긴급구호, 농축산, 보건의료, 취약계층(우선복지) 그리고 사회인프라 분야별 지원 성과와 민간단체별 활동에 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1)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의 시작과 발전

(1) 대북 인도적지원의 시작 : 1990년대 초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인도적지원은 6.25전쟁 45년 만인 1995년 6월 25일 15만 톤의 쌀이 항로를 통해 지원되었다(통일부, 2021). 하지만 이보다 5년 앞선 1990년 3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일보가 공

동으로 전개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통해 민간차원에서 약 800톤의 쌀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는 1984년 북한적십자사가 남한에 보내왔던 수재 물자에 관한 보답 형식으로 민간 차원의 첫 물자교환이었다(조대엽, 홍성태, 2013:231). 그 후 1990년 7월 재미 한인 의사 박새록(이후 샘복지재단 설립)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미기독교의료선교회의 주도로 5년 동안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모금된 금액으로 1995년 11월 한국선명회(현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기구(현 기아대책)와 공동활동으로 평양에 제3인민병원을 개원했다. 그 과정에서 국내 기독교단체와 한민족통일준비모임도 북미기독교의료선교회를 통해 의료품을 지원했다². 초기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지원 활동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해외단체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법은 추후 남북관계 또는 정권이 변화하면서 직접지원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였을 때 활용되기도 했다³.

1995년 공식적인 첫 대북 인도적지원 후 ‘유진벨재단(1995)’, ‘어린이깨동무(199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1996)’,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1997)’, ‘한민족복지재단(1997)’, ‘국제옥수수재단(1998)’ 등 주요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가 발족하며 다양한 긴급구호·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이 이루어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국의 천주교, 기독교, 불교계 등 6대 종단과 주요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운동조직으로 창립하여 한국 사회 내 대북 인도적지원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진벨재단의 경우 초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도적지원을 진행했지만 1997년부터 결핵퇴치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했다.

2 국내 기독교단체는 약 34만 달러 규모의 혈압기, 의료용 침대 등을 지원했으며 한민족통일준비모임도 10만 명 분량의 콜레라와 장티푸스약을 긴급지원하였다.

3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협상 없이는 인도적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WFP, UNICEF, UND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막을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및 JTSA와 같은 민간단체는 중국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을 택하거나 월드비전과 같은 국제 NGO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추진했다.

(2) 대북 인도적지원의 확산 및 성숙기: 1990년대 후반 ~ 2010년

1995년, 김영삼 정부는 민간 대북 인도적지원 사업에서 창구 다원화는 무분별한 경쟁을 유발하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 대북 인도적지원의 창구를 단일화했다. 하지만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대북 인도적지원 창구가 다원화되었으며 김대중정부에서 시작되었던 햇볕정책이 노무현 정부까지 지속되었다. 지속적인 대북정책으로 인도적지원 활동에 언론사, 기업계, 지방정부에서 형성된 협의체 등이 더욱 활발히 참여하였다. 이 시기 대북 인도적지원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규모가 확대되어 역대 지원액 중 식량 차관을 포함한 약 85%(통일부, 2021:275)가 지원되었다.

2004년도엔 육로를 통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그다음 해엔 인도적 지원에 경의선이 처음 이용되기도 했다. 또한, 2004년 평안북도 용천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고 때 긴급구호 지원을 계기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관의 경험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지기도 했다(조대엽, 홍성태, 2013:230). 이와 더불어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연계된 거버넌스 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체계화되는 시기였다.

사업의 규모와 참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방식도 더욱 구체화하였다. 긴급구호의 성격이 강했던 대북 인도적지원 초기보다 병원, 국수·식료품, 합영농장 건립 등 개발지원적 방식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대북 인도적지원이 활발해지면서 1999년 20개의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가 상호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를 결성하였다. 현재는 58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그중 50% 이상이 1998~2010년에 사이 설립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와 함께 2000년 중반 이후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의 활동은 긴급 구호 형식에서 개발협력 형태로 전환되어 갔다. 또한, 사회인프라 분야의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대식 농업·보건의료·산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한 전문가의 기술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문경연, 박지연, 송영훈, 2018:114).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는 대북제재가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국내적으로 활발한 대북 인도적지원이 이루어졌다.

(3) 대북 인도적지원의 침체기 : 2010년대 초반 이후 ~ 현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졌던 총 4차례의 핵실험으로 대북제재는 금융, 운송, 무역 분야까지 확대, 강화되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5·24조치⁴와 같은 해 11월 23일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긴급구호나 영유아와 같이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대북 인도적지원 사업이 전면 보류되었다(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53). 그 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62억 원이 국제사회를 통해 지원되었을 뿐 당국 차원의 지원은 없었다. 민간 차원의 지원액은 약 354억 원으로 총 2,213억 원이 지원되었던 이전 4년(2007~2010년)과 비교했을 때 16% 정도 금액 규모의 지원품만 전달 가능했다(통일부, 2021:275). 많은 단체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활동이 축소되거나 종료되었다. 그 중 나눔인터내셔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유진벨재단과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결핵퇴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유진벨재단만 계속해서 활동을 유지했다.

4 5·24조치는 2010년 5월 24일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관한 대응으로 내린 대북제재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후 광복 70주년을 맞았던 2015년과 결렬된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린 2019년 각각 254억 원과 277억 원 상당의 인도적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등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대화가 일방적으로 단절되었다. 이후 2021년 7월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 후 7월 30일 인도적지원에 관한 인도물자 반출승인이 내려졌다. 이를 시작으로 민관소통이 다시 활발해졌으며 각 민간단체도 인도물자 반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온도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다. 남북통신선 개통 2주 만인 8월 10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10월 7일 다시 남북통신선이 재개되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 영양과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1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할 것을 밝혔다(YTN, 2021). 또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북 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2)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의 주요 활동 및 성과

145개의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는 긴급구호 또는 보건의료·영양·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대북협력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태국, 몽골, 네팔 등), 한국 디아스포라(조선족, 고려인, 재일교포 등) 대상 사업과 평화교육을 진행해왔다. 단체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북 인도적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자 한다.

대북 인도적지원은 일반 및 긴급구호, 농축산, 보건의료, 취약계층(우선복지), 사회인프라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문경연, 이우영, 정소민, 2017:39). 각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대상자와 특징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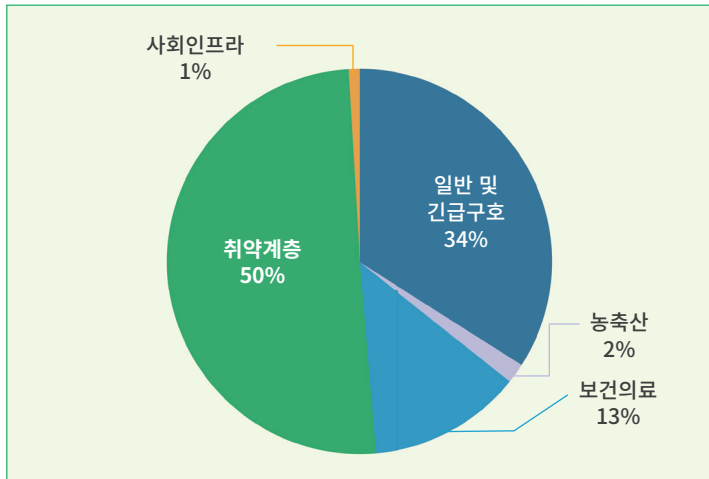
<표 1>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지원대상자 및 분야별 특징

분야	대상자	특징
취약계층 (우선복지) (50%)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고아 등	- 장기, 지속적 사업 - 식량 지원 - 방한용품, 난방 관련 등 비식량 물품 지원 - 어린이 대상 교육지원(학습교구 등)
일반 및 긴급구호 (34%)	불특정 다수	- 인재 및 자연재해(수해, 가뭄 등) 상황에서 지원 - 단기간/비정기적 지원
보건의료 (13%)	주민	- 의약품·의료 기자재 지원 - 병원 건립, 개선 - 의약품 또는 의료기자재 생산 공장 지원, 개보수 사업
농축산 (2%)	농가	- 농업, 축산, 수산 관련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시설, 자재 지원 - 각 분야의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지식협력사업
사회인프라 (1%)	지역 내 커뮤니티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발	- 상하수도 개선 사업 - 학교 건립, 개선 - 산림녹화, 환경 관련 사업 등

*자료: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2015. 「대북지원 20년 백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p.50-51에서 재구성.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다섯 가지 분야 중 취약계층 지원이 전체 지원의 약 50%를 차지했다. 일반 및 긴급구호 지원이 약 34%로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 농축산, 사회인프라 분야는 각각 13%, 2%, 1%로 사회인프라 분야가 가장 작은 규모의 지원을 보였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

는 기본적인 지원의 방식으로서 1995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 상황에 취약계층이 우선복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가장 오래 지원되었다. 사회인프라 분야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요구하지만, 지원 결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그와 동시에 지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대북 인도적지원이 2015년까지 중단되기도 했다(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157). 분야별 주요 사업 성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1995~2015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별 비중 표

*자료 : 문경연, 이우영, 정소민. 2017. 「대북지원 20년(1995~2015):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성과와 과제」 국제관계연구. 22(1). p.41 참고.⁵

5 해당 그래프는 통일부의 허가를 받은 대북지원지정단체 104개 중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원단체이자 초창기 대북지원 시기부터 현재까지 대북 인도적지원을 지속하는 단체로서 ‘대북지원 20주년 백서’ 제작 시 자료를 제공한 34개의 단체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1) 일반 및 긴급구호

일반 및 긴급구호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정치적 영향력을 비교적 덜 받으면서 활동을 이어왔다. 일반 및 긴급구호 물품 지원은 북한 내 자연재해 혹은 큰 규모의 사고가 있을 때 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4년 평안북도 용천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국제사회와 함께 국내에서도 민·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민간 차원에서는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피해동포돕기운동본부’(약칭: 용천동포돕기본부)를 결성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용천재해지원활동을 기점으로 긴급구호 매뉴얼을 작성하여 효과적이고 빠른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시스템 덕분에 2006년에서 2015년까지 태풍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지원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2) 농축산

195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무리한 농경지 확장, 강제된 ‘주체농법’의 시행과 경제구조의 붕괴로 인해 1990년대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였다. 1952년 북한은 김일성의 ‘대자연 개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지·염전 조성, 급경사지의 밭을 과수원·뽕밭으로 조성했다. 농산물 생산과 환경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무리한 농경지 확장으로 그 당시 북한의 토지 상황은 폭우에 취약한 상태였다. 거기에는 휴경·윤작이 행해지지 않아 지력이 저하되었다. 1970년대 김일성이 직접 연구했다고 거짓 선전되어 강제로 사용된 ‘주체농법’ 중 밀식재배 방법은 1980~90년대 북한의 농경지 토양을 산성화시켜 농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자원·에너지·식량 등 많은 부분을 소련과 중국에 의존했던 북한은 소련이 붕괴하자 전력·석유 등의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는 곧 농업기계, 시설 등의 가동률 저하로 이어져 1990년대 초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 농축산 분야의 사업은 주로 초기

농자재 지원을 통한 단순 구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이 완화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다섯 개의 분야 중 처음으로 단순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자체적으로 재배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농기계·돼지사료 생산 공장, 시범농장건립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남북농업과학심포지엄’을 통해 남북 농업 전문가들이 함께 농업기술 및 지식 전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3) 보건의료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로 의료지원이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항생제, 진통제, 영양제 등과 그 당시 북한 어린이의 주 사망원인인 호흡기질환 및 설사 치료제와 영양제를 함께 지원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는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과 의료장비나 기기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지속가능성을 위해 병원이나 제약공장 설립을 지원하면서 북한 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또한 북한의 거부로 직접적인 교육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의료장비나 기기 지원 시 각종 지침서를 제공하여 북한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지원 물품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보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5·24조치 이전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AI),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나 질병이 확산할 때마다 의약품이나 의료장비를 지원했다.

(4) 취약계층(우선복지)

대북 인도적지원 초기의 경우 포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장기간 사업이 지속되면서 특정 대상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업의 진행 방향이 물자 중심의 일반 구호사업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달라졌다. 예를 들면 초기에는 아동급식을 위한 식

량 지원을 하다가 북한과 협의를 거쳐 분유, 빵, 국수의 원재료를 지원했다. 그 후 빵, 국수, 두유공장을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면서 기근이나 빈곤, 질병 등을 겪고 있는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 우선복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은 일반구호 분야와 더불어 정치적인 제약을 적게 받았다. 다른 분야의 활동이 중단되었던 5·24조치 이후에도 영유아 및 우선복지 지원의 경우는 예외 조항을 통해 소규모 지원이 가능했다.

(5) 사회인프라

사회인프라 분야는 가장 늦게 지원이 시작된 분야로 지원 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전체 사업 분야 중 약 1%를 차지한다. 규모가 가장 작지만, 단순 구호적인 성격을 보이던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지원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시설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전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체별 주요 활동 분야는 달랐지만 5개 분야에 걸쳐 많은 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대북 인도적지원이 지속된 기간 인도적지원 금액이 100억 원 이상 되는 민간단체는 총 14개 단체였으며, 그중 4개 단체가 500억 원 이상 지원하였다. 이들 상위 4개 민간단체의 지원 규모는 약 6,300억 원으로 전체 민간단체 지원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표 2>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대형 민간단체

지원금액	단체명
100억 원 이상	나눔인터내셔널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샘복지재단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월드비전
	한국JTS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민족복지재단
500억 원 이상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남북나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유진벨재단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흐름을 알아본 결과 물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분야보다 사업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는 북한인권 분야 보다 상대적으로 국내외 정치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각 분야의 지향점

인권(Human Rights)과 인도적지원(Humanitarian Aid)은 단어에 사람이라는 뜻의 ‘human’을 포함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인도적지원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도덕에 바탕을 두고 지지하여 돕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인권’과 ‘인도적지원’모두 사람을 위한 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북한인권 분야와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역시 ‘북한의 사람을 위한 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각 분야는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번 절에서는 ‘인권’의 기본 개념과 ‘인권’에 포함되는 권리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람을 위한 일’이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두 분야의 활동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알아본다. 그 뒤에 각 분야는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떠한 차이를 가졌는지 알아본다.

1) 인권의 시작 : 세계인권선언문

인권 개념은 18세기 유럽의 홉스, 로크,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자연권 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여겨진다(정영철, 손호철, 2014:261).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권’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되면서 부터다(전재호, 2015:228).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20년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실패로 돌아갔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수많은 희생자와 상처가 남았다. 국제연맹의 실패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반인도적, 반문명적 악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법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절

감했다. 그 결과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가입국 56개국 중 48개국의 찬성으로 <세계인권선언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언급하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에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문에서 명시하는 권리가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이 될 것을 선포하였다. 그와 함께 1993년 세계인권선언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강령(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관해 제2부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외교부, 2021).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이며, 독립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 국제공동체는 인권을 총체적으로 공정하고 동등한 방법으로, 동일한 토대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며 다루어야 한다. 국가적·지역적 특수성의 의미와 다양한 역사적·문화적·종교적 체계와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의무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전 세계 국가와 국민이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문서로써 전 인류가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문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B규약)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권조약 및 협약이 탄생했다. 이러한 조약들은 많은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선언의 내용이 하나의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자유권규약은 모든 인간은 천부적 인권을 부여받은 인간으로서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누리며,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 자유, 공정한 재판, 이동의 자유, 사상, 양심, 평화적 집회, 가족, 사생활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표 3> 자유권규약의 주요 내용

1 생명권과 인간존엄성	4 집회·결사의 자유
2 신체의 자유	5 사생활의 보호
3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6 정치활동의 권리
	7 법 앞의 평등

사회권규약은 인간으로서 합당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중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5부 31조에 걸쳐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과 노동환경, 식생활, 건강, 주거, 교육 등에 관한 권리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표 4> 사회권규약의 주요 내용

1 자결권	5 주거권
2 노동 및 그와 관련된 권리	6 건강권
3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7 교육권
4 식량	8 사회보장권

두 규약 모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인권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다양한 사회에서 사는 개인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인권의 역사는 서양 역사의 흐름과 같이 발전해 왔기에 서양적 가치에 기초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의 유교문화적 공동체주의가 서구의 개인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논쟁으로 이어졌다(조효제, 2007; 허만호, 2014).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론은 ‘인간에 관한 존중의 정신’과 ‘인권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과 인권조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북한은 1981년 12월 14일에 발효되어 해당 규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유엔은 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에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와 인권조약이행감시기구에서 개별 조약상의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인권조약이행감시기구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 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견과 개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채택한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에 관한 강제성이 없고, 당사국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보고서를 예정된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북한의 경우 자유권규약에 관하여 1984년과 2000년 총 2회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사회권규약에 관한 보고서는 1987년과 2003년 총 2회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 관한 보고서를 2004년과 2008년에 세 번째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유엔, 2021).

UPR은 유엔 회원국 모두가 4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북한은 2009년 12월, 2014년 5월, 2019년 5월에 걸쳐 총 3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지난 2021년 7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에 관한 자발적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 북한인권 분야의 지향점

북한인권 단체들은 운동의 가치, 주요 활동,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 규명 차원에서 공통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각 단체의 활동 근거를 인권의 보편성에 두고 있었으며 유엔인권규약을 중심으로 주요활동을 전개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을 북한 정권의 독재체제에서 찾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보편성은 북한인권 단체의 주요 활동 동력이자 철학으로 기능하며 북한인권 단체가 주요 활동 무대로 국제사회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북한 정권에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국내 북한인권 단체의 활동이 ‘반공·반북’으로 여겨지며 정치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단체이든 ‘비정치’를 선언하고 중립적 인권운동임을 강조하는 단체이든 모두 활동의 핵심 가치에는 인권의 보편성을 두고 있다. “왜 북한인권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인권 단체들은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 그 권리를 북한 주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 NAUH, 창립취지문 중 일부 발췌

인권의 보편성이란 ‘모든 사람이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은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해 전 세계적 가치로 공표되었으며 전 인류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공동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해 공표된 인권의 보편성과 구체적인 권리는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레짐으로 형성되어 있다. 국제인권레짐은 인권을 개인에게 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초국가적 성격을 띠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은 북한인권 단체가 보이는 공통점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인권레짐의 기본 성격은 다음과 같다(정천구, 2005:265).

첫째, 인권을 기본적으로 집단이 아닌 개인에게 속한 권리로 인식한다(Ibid.). 세계인권선언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제1조)”, “모든 개개인 … 어떤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제2조)”라고 선언되어 있듯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⁶

둘째,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 초국가적 성격을 띤다. 유엔의 창설과 국제인권레짐의 발전에 따라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인간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에 서명한 국가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100여 개 국가에 이르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한 유엔의 다양한 인권 기구의 활동은 인권에 관한 한 국가주권 및 내정불간섭 원리

6 하지만 인권 개념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서 사회적 권리, 제3세대 인권으로 여겨지는 발전권, 평화권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 인권의 개념이 ‘개인의 자유’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권의 적용 대상은 ‘집단’이 아닌 ‘개인’을 의미한다.

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두 가지 특징이 북한인권 단체의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유엔 인권규약

북한인권 단체는 앞서 설명하였듯 인권의 보편성을 핵심 가치로 삼기 때문에 국제인권레짐의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인권레짐의 ‘초국가적 성격’과 연관이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문과 여러 인권규약에 기초해 가입국에게 인권 상황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규약별 유엔 산하 전문 기구를 통해 인권이행 상황을 감시한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선언의 형태로서 도의적인 구속력은 지녔으나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반면, 인권규약은 가입국에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현재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약칭 사회권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약칭 자유권규약)’과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상태로, 가입국으로서 인권규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의무를 지닌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한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외교를 의식하여 부족하게나마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고 있다.⁷

북한인권 단체는 국제인권레짐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7 북한은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 한국보다 9년 앞선 1981년에 가입하였다.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은 정기적으로 국내 내부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북한은 각각 2000년, 2003년 이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은 모두 2016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는 가장 최근인 2019년에 제출하였다. 유엔 인권규약 중 가장 핵심적 규약이라 할 수 있는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서 북한이 국제적 차원의 인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⁸ 유엔 인권규약에 근거해 국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일반적으로 북한인권 단체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무시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만 활동한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다소 왜곡된 것으로 대다수의 국내 단체가 북한의 식량난과 기아 문제를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여성 및 아동, 장애인 인권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이준태, 2015:92). 하지만 북한인권 단체의 시작과 성장기에 자유권규약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다음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북한인권 단체는 활동 초반과 성장기에 북한의 계급제에 따른 차별, 정치범수용소 실태, 납북자 실태, 종교활동 침해, 강제 송환 탈북자 고문, 생명권 침해 등에 주목하며 자유권규약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했다.

<표 5> 북한인권단체 보고서 목록과 자유권규약

연도	보고서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권리
1990년대	<북한인권시민연합> [1998] Voice From The North Korean Gulag [1998] North Korean Refugees [1998] Defector	생명권 인간존엄성 신체의 자유
2000년대	<NK Watch> [2004]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명단 ‘잊혀진 이름들’ <북한인권시민연합> [2004] Prisoners of Their Own Country [2005] 2000년 7인 탈북자 강제송환사건의 재조명 [2007] 고문의 공화국, 북한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북한인권통계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 [2008]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	생명권 인간존엄성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권리

8 국내 첫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창립취지문에서 운동의 방향성에서 ‘국제운동’임을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운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운동 방향을 놓고 볼 때 국제운동이요.”

또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하는 북한인권 단체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행사인 북한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를 살펴보면 중국 거주 북한난민에 관한 논의와 함께 정치범수용소와 종교의 자유, 납북자 등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이준태, 2015:93).

(3) 북한 정권 책임론

북한인권 단체의 또 다른 공통점은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을 ‘북한 정권’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인권단체는 ‘북한의 독재체제’를 핵심 원인으로 꼽을 것이다.

이런 인식은 국내 주요 단체의 창립취지문 및 단체 미션과 각 단체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설립된 주요 단체는 단체의 창립취지문에 “북한 당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 “우리는 이 비극의 책임을 김정일 폭압 정권에 묻습니다”와 같이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음을 아예 명시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북한인권 실태 연구에 초점을 맞춘 단체 역시 ‘북한인권의 구조적 문제’의 원인이 북한의 정치 시스템에 기반한다고 판단한다.

<NAUH 창립취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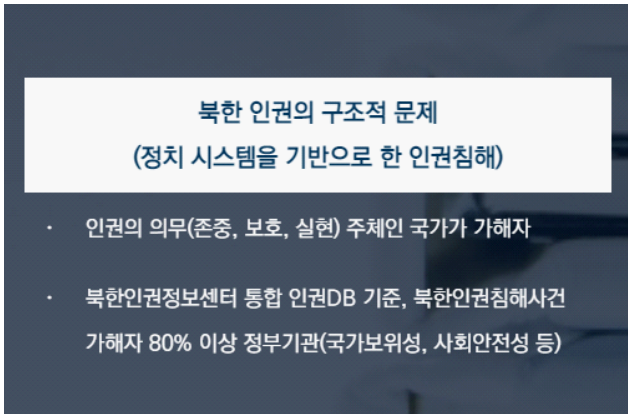
북한당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민을 위한 사회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생계를 위해 강을 건넌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중국에서 복송된 이들은 짐승처럼 고문당해 버려집니다. 만18세도 안 된 아이들을 군대에 징집당하고, 배급이 완전히 끊긴 것은 이미 10년도 넘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NK Watch 창립취지문>

엔케이워치는 김정은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독재의 수단이자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정치범 석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창립취지문>

우리는 이 비극의 책임을 김정일 폭압정권에 묻습니다. 김정일이 개인숭배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2천만 민중의 생명을 저당 잡았을 때, 우리는 이미 아주 분명한 악과 대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림 2] 북한인권정보센터 미션 중 일부

북한인권 단체의 이런 인식은 북한 인권침해 사례 연구 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책임자가 주로 북한 정권과 고위 관료, 북한 체제의 경직성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단체가 인권의 보편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개인에게 속한 천부적인 권리이며, 국가의 정당성과 국가주권의 인정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를 기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시스템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교체되어야 하며, 북한 정치시스템의 핵심축인 김씨 일가는 인권침해의 책임자로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⁹

국내에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적 영역에서 이데올로기화되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국내적 배경에 의해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북한인권 단체는 정치적 보수로 여겨지곤 하며, 국내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와 북한인권 단체 간의 거리감이 생성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북한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3)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지향점

통일부 대북지원 지정단체 중 많은 단체의 주요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은 활동의 가치, 사회권규약 중심의 권리 증진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1995년 공식적인 첫 인도적지원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민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북녘의 동포를 돕고, 이를 시작으로 민족 과제 중 하나인 통일을 이루고자 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는 활동 초기에는 완제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단순 지원의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원 형태가 다양해지고, 원자재 지원과 공장설립 등의 협력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래서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은 북한은 협력의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쌓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관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건강, 교육 상황 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9 국가의 주권보다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인식은 국제인권레짐 차원에서도 점차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식으로, 국가는 한 사회 내부 성원들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해 줄 수 있을 때만 정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장은주, 2009:297).

(1) 민족주의

‘민족’은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평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다. 넓은 의미에서 민족이란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이 경제, 언어, 문화, 정치 등의 사회적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의미한다. 민족주의의 개념은 민족을 으뜸으로 생각하여 민족의 독립과 통일, 그리고 발전을 꾀하는 정치이념이다(정지용, 2004:227).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는 한반도에 살면서 같은 혈통을 유지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민족주의로서 작용하고 있다(양정훈, 2012:170). 초기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가 식량난을 겪는 북녘의 동포를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과 통일은 우리만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고, 진정한 통일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는 ‘민족’이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또한, 분단된 한민족의 상처를 치유·화해하고 협력을 통한 통일을 지향한다. 즉, 보편성보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한반도식 민족주의가 핵심 요소이다.

단체의 주요 사업 분야, 종교적 색채 등에 따라 설립목적 및 활동의 비전과 미션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민족주의적 시각은 많은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의 설립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민족돕기운동 비전과 미션>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 간 교류사업을 통해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이루어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겨레하나 소개>

다른 듯 닮은 남북의 모습은 오랜 역사를 함께 해 온 한 민족, 한 핏줄임을 말해줍니다. (중략) 남과 북의 화해는 한반도 평화의 바탕입니다.

<한민족복지재단 소개>

‘세계 각지에 살고있는 우리 민족이 협력하여 민족의 번영과 통일,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중략)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민족 화해를 실천하고 있으며, 국내외 소외계층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곳곳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은 분단상황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민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식량·농축업·의료·교육 지원, 식품 및 의료품 생산을 위한 공장 건축자재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특징이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의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2) 유엔 인권규약과 SDGs

분단 후 지금까지 북한은 여러 번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제재를 받고, 현재는 북한 내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에서도 국내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은 한민족인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북 인도적지원 활동과 국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민족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활동 초기에는 단순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활동이 다년간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교류 협력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활동을 지속하고,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상대인 북한과 신뢰 관계 형성은 필수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는 식량과 의료품 지원 또는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을 위한 자재 등 북한이 국제사회에 요청하거나 대북제재가 면제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는 아동,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권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즉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등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6>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 활동과 사회권규약

연도	단체 및 활동 내용	사회권 규약에 명시된 권리
1990년대	<p><한국 JTS> 영양식 가공공장 설립 농업지원</p> <p><유진벨재단> 다제내성결핵 치료를 위한 의약품 지원</p>	식량권 건강권
2000년대	<p><어린이어깨동무> 교육환경 개선사업 : 개성공단 탁아소지원, 학용품공장 설립 영양증진 사업 : 평양, 원산 등 공유유 공장 설립 보건의료 사업 : 어린이병원 입원 병동 건립 및 지원</p> <p><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농업축산분야 관련 지원 및 공장설립 보건의료 관련 약품공장 및 동물실험실 설립 지원</p> <p><어린이약품지원본부> 병원 현대화 사업 왕진가방 지원</p>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는 북한 내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확산했으나 국제인권 담론 및 메커니즘의 동향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서보혁, 2014:46). 이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적 지위(ECOSOC)를 인정받아 국제활동을 전개하거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대북개발지원을 융합하는 등 활동의 범위와 방향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분단은 이념 대립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인해 나온 결과가 아닌 국제 정치의 결과물이라는 시각 아래 국제사회의 지지와 인정이 필요하므로 시민사회 간 초국가적 네트워크 확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러 단체 중 하나인 ‘좋은벗들’은 1997년부터 식량과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북한이탈주민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속 2021년 7월 북한이 처음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에 관한 자발적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번역하여 배포하는 등 SDGs와 같은 국제인권담론에 기반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표 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 권리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권리
SDG 1 (빈곤퇴치)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SDG 2 (기아종식)	식량권
SDG 3 (건강과 웰빙)	건강권
SDG 4 (양질의 교육)	교육권
SDG 5 (성평등)	성평등, 여성인권 ¹⁰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물에 관한 권리, 건강권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노동권,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노동3권

10 SDG 5의 경우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의 내용에 높은 반영률을 보였다. 즉, CEDAW에서 논하는 여성의 식량권, 교육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하였다(김수진, 2018:154).

지난 2021년 8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서는 <북한VNR을 읽어드립니다>라는 기획강좌를 열기도 하였다. VNR을 번역, 분석하여 나눔으로써 북한 내부의 사회권규약과 관련된 권리 수준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단체의 활동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북한과 협력관계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의 또 다른 공통점 중 하나는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주요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의 설립목적 또는 소개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설립목적>

... 북녘 어린이 의약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펼치고 남북 보건의료인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바람직한 남북보건의료제도를 모색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누리 설립목적>

... 남과 북의 문화접촉점을 찾아 막혀 있는 남북 교류와 소통의 장을 열고, 민족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합니다.

<겨레하나 소개>

... 문화예술교류와 남북학술토론회, 남북대학생대회 등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의 만남을 만들어왔습니다. 겨레 하나는 남북이 더 많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할 때 통일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핵심목표와 10대 실천과제>

민족 공동 발전과 남북 간 격차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의 확대

- ① 농축산, 보건의료, 생태환경, 지식공유 분야 등에서 지속가능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의 남북협력사업 선도
- ② 인도적 필요가 있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서로돕기운동의 확대
- ③ 남북 교류 협력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평양사무소 설치와 관계망 구축
- ④ 비전의 공유와 평화협력을 위한 재외동포 사회와의 관계 증진

위와 같은 단체 소개 및 목적 등을 통해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업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북한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 인도적지원 물자 반입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게 된다면 단체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북한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4. 소결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상황이 알려진 이후 3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북한인권 분야와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는 함께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두 분야의 큰 흐름과 지향점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시작된 북한인권 운동은 인권의 보편성을 중심가치로 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많은 조사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국내외 캠페인 활동에 활용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가 설립되어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또한, 유엔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되어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하여 모니터링과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활동에 있어 많은 단체는 북한 정권에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책임을 물으며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콘서트, 전시회 등 문화적 요소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및 북한인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공식적 지원을 포함해 북한인권 분야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한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은 민족주의적 시각에 기반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활동을 전개해왔다. 활동 초기에는 피를 나는 북녘 동포의 식량난과 자연재해 복구 및 구호를 위한 긴급구호키트 지원 등 완제품 위주의 단순 지원에 그쳤으나 점차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대북 인도적지원과 공적개발원조의 특성이 융합되어 식량, 의료·교육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의 내용은 점차 구체화되어 가지만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 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는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두 분야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아래 <표 8>과 같이 각 분야의 지향 가치, 중점을 두는 권리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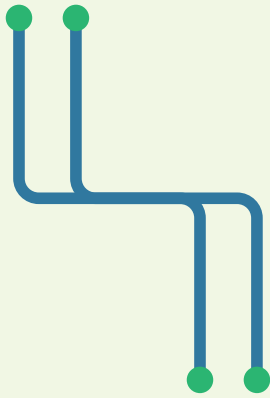
<표 8>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차이점

	중심가치	유엔인권규약	북한관
북한인권	인권의 보편성	자유권 중심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책임의 대상
대북 인도적 지원	민족주의	사회권 중심	협력의 대상

북한인권 단체는 인권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식 인권’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 납북자 실태, 종교활동 침해 등 자유권규약과 관련된 권리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깨닫게 되었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되어 직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후 작성된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상황은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함을 명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북한인권 분야에서 주장했던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음에 힘을 실어주었고, 지금까지 많은 단체들이 북한 정권의 책임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는 북한인권 단체와는 다른 시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먼저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에 기반해 북녘 동포를 위한 구호물품 지원, 식량과 의료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 자재품 지원 등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의 활동은 완제품을 지원하는 단순 지원 형태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활동의 형태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국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활동의 범위를 넓혀 국제단체와의 연대와 함께 유엔의 지속개발가능목표(SDGs)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장. 우리 안의 같음과 다름

: 북한인권·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의 이야기

2장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각 분야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각 분야 활동가를 만나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란 단어는 ‘통일’, ‘정치’, ‘외교’와 같이 무거운 단어와 함께 주로 논의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 개인의 생각들이 때로는 커다란 주제에 묻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북한인권 분야와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와 진행한 1:1 인터뷰 내용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커다란 담론 속에 숨겨진 활동가 한명 한명의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활동가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의 생각을 확인해봅니다.

1. 이런 사람이 참여했어요

: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인권·대북 인도적지원 활동가 소개

앞서 문헌 연구를 통해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민간단체 활동의 흐름과 현재 한국 사회 내 존재하는 인권에 관한 시각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후 2021년 8월 각 분야의 활동가 3명씩 총 6명의 2030세대 활동가 대상 개인 인터뷰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설문지는 인권에 관한 개인의 생각과 북한관, 상대 분야에 관한 생각,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하였으며 소속 단체명의 경우 ‘대북 인도적지원 1, 2, 3’ 또는 ‘북한인권 1, 2, 3’으로 표기하였다. 인터뷰 내용의 다양성을 위하여 성별, 출생연도, 활동 기간, 단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였다. 여섯 명의 활동가 중 유정아(인권 2)와 이찬범(지원 1)은 외국 국적의 활동가이다. 국적에 따라 활동 범위 또는 계기가 달라질 수 있어 비고란에 ‘외국 국적 활동가’로 기입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활동가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질문에 관한 관심이 있었으며 소통에도 열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 소속 활동가는 활동 기간이 3년 이내였고, 반대로 북한인권 단체 소속 활동가는 3년 이상이었다.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 중 3년 이상의 활동가들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참여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연락을 취했던 북한인권 단체 소속 활동가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의 성격 때문에 북한 측 사업 상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북한인권 단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거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알려진다면 단체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뷰를 요청했던 시기가 2021년 7월인데 중단되었던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이 재개된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도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심층인터뷰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9> 심층 인터뷰 참여자 정보

이름	연령	성별	소속	경력(년)	비고
김규민	30대	남	북한인권 1	8	북한출신 활동가
유정아	20대	여	북한인권 2	6	
강하영	30대	여	북한인권 3	3	해외 국적 활동가
이찬범	30대	남	대북 인도적 지원 1	3	해외 국적 활동가
김유진	30대	여	대북 인도적 지원 2	1	
박나은	20대	여	대북 인도적 지원 3	1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의 의견이 각 분야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활동가들의 생각을 통해 우리 안의 같음과 다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일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직업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진들은 북한과 인권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활동가’로서 우리 안의 같음과 다름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분야에 활동하게 된 계기와 활동가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질문했다.

2.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인터뷰 참여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개별인터뷰와 FGI를 진행하면서 활동가들의 다름과 비슷함 속 협력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1)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 해당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6명의 활동가가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크게 ‘북한과 관련된 경험’, ‘주변인의 조언’, ‘종교’로 나뉘었다. 먼저 인터뷰 참여자 유정아(인권 2)와 강하영(인권 3)은 북한 또는 북한인권에 관심은 없었다. 하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이 자신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북한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저는 북한인권보다는 북한에 관심을 먼저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가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국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어가지고 한국, 남한보다는 북한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받았어요. ‘북한은 왜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핵을 개발하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보다 다른 친구가 북한인권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외국인 이.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책을 주면서 내가 읽어야 될 것 같다 해서 탈북민 수기를 읽으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하는 행사 진짜 많이 다니다가 한번은 김혁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와 닿아서 논문도 북한인권에 관해 쓰고 인권 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던 것 같아요. - 유정아(인권 2)

저는 석사과정을 코스타리카에서 유엔평화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수했는데, 그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일하셨던 스태프 중 한 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분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COI 활동에 관해 강의

를 해 주셨어요. 강의 후에 친구들이나 클래스메이트들이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었나?’라고 물어보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강의해 주셨던 분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을 때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단체들에서 인턴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람, 재미, 흥미를 느끼고,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같은 민족인 북한인권 분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강하영(인권 3)

반대로 김규민(인권 1)과 이찬범(지원 1)은 주변인의 조언을 시작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인터뷰 참여자 김규민(인권 1)은 2006년 한국에 입국한 북한출신이지만 대학생할 중반까지 북한의 삶을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북한출신들이 북한을 위해서 인권 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라는 선배의 조언을 듣고 북한인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치학에 관심이 많았던 이찬범(지원 1)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언을 통해 북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국에 도착하고 고등학교 생활하고 대학교 생활하면서 사실은 북한인권, 북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북한 출신이긴 하지만 그쪽의 삶을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잘해서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끄고 살았는데요. 그때 학교에 다른 북한 선배 중에 지성호 대표가 있었어요. 탈북민이다보니까 수업 듣다 알게 되어 그분이 우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북한 출신들이 북한을 위해서 알리고 활동 안 하게 되면 누가 하겠냐. 우리라도 알리는 활동을 청년들끼리 하자’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호기심 반, 뭐 그냥 형이 그냥 같이 하자 하니까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구출 현장에서 만난 탈북민을 보면서 한 명에게라도 자유와 희망을 찾아 주자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 김규민(인권 1)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북한에 관해 공부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했었죠. - 이찬범(지원 1)

우연히도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 모두 종교가 있었다. 그러나 이 중 참여자 김유진(지원 2)과 박나은(지원 3)만이 종교가 그들의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이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야기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선교단체에서 통일, 대북관계 등에 관해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종교적인 이유가 합쳐지면서 ‘이 분야에서 한번 일해 봐야겠다. 그러면 인생에 후회는 남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김유진(지원 2)

저는 교회에서 탈북민 선교사님의 강연을 듣고 고등학생 때 처음 북한의 실상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선교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아, 나는 한국에서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내 또래 아이들은 정말 믿기만 해도 그렇게 사살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북한과 남한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고 관련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코이카 YP(Young Professional)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박나은(지원 3)

6명의 활동가는 ‘북한과 관련된 경험’과 ‘주변인의 조언’, ‘종교’를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통으로 북한에 관심이 높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어릴 때부터 NGO활동을 하고 싶었고, 오히려 인도주의적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다니면서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런 배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케냐와 인도에서 인도적지원을 하는 단체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지금 당장 소수의 사람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인권 분야가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북한인권 NGO에 오게 되었습니다. - 유정아(인권 2)

저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세계의 시각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인권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인권은 정말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인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북한인권 문제나 개발 대상국의 여성 문제 등에 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과 국제개발에 대한 마음이 합쳐져 인턴으로 시작한 일이 정직원으로 전환되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 박나은(지원 3)

제 스스로도 탈북민이지만, 구출 현장에서 탈북민을 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돈 벌어서 잘 살겠다’는 내 가치관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당연히 여겨지는 자유와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천만 명이 넘는 탈북민 모두에게 (자유와 희망을) 찾아주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탈북민에게 만이라도 (자유와 희망을) 찾아주자 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규민(인권 1)

비슷하지만 다른 분야의 활동가 사이에 많은 교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인권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북한인권 분야에서 활동’ 그리고 ‘민족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은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에서 활동’을 한다는 비공식적인 공식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활동가로서 자신

: 활동하면서 고민되는 점, 동기 부여·저하 되는 점

6명의 활동가 모두 ‘사람’이 그들의 활동 에너지였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주변인의 반응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활동이 ‘가치 있음’을 느낄 때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와 함께 북한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을 느낄 때 동기 부여가 된다고 하였다.

동기 부여를 얻는 것은 진짜 딱 하나가 있는 게 인터뷰를 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탈북자분을 만날 때는 확실하게 이게 동기 부여가 돼요. 아, 이게 내가 하는 일이 그래도 소용없는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강하영(인권 3)

제가 하고 있는 캠페인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약간 좀 ‘아, 이거 해야 하긴 하는구나. 누군간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서로를 덜 미워하는 세상을 만들고,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자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구나 싶어서 힘이 나요. 그리고 국제 뉴스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교류의 장이 열린다는 소식만 들어도 힘이 나요. - 김유진(지원 2)

활동할수록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북한인권 활동을 지켜봐 주고, 가끔 사무실에다가 먹을 것을 보내주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북한인권 활동이 금전적으로 버는 것은 없어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구출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한 명 두 명 들어온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찾아와서 표현할 때마다 뭐랄까 ‘아, 이런 게 북한인권 활동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다른 단체를 보면서, ‘이렇게 한 명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앞으로 북한에 해방이 올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 사회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인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김규민(인권 1)

1995년에 처음으로 북한이 국제 원조를 요청했을 당시에 근무하시던 분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그분들이 경험한 북한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로 들으면서 지금 제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해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껴요. ...사진과 영상 같은 기록물을 통해 변화를 보면서 제 기준에 조금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동기 부여를 받고 있어요. - 이찬범(지원 1)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이슈를 알릴 때, 누군가의 표정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뭔가 했구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외교관과 미팅하는 데 보람을 많이 느껴요. 또 이제 유엔에서 북한인권 이슈가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가끔 외신에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활동이 소개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온 분들이랑 인터뷰할 때 그분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COI가 설립된 2015년에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을 때(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movement가 천천히 가고 있지만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 동기 부여가 돼요. 또 저는 사실 요즘에 우리 단체에서 무급이지만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인턴생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되게 많이 얻는 거 같아요. - 유정아(인권 2)

우리가 가치 지향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결과가 긍정적이고 선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진행한 사업에 통일에 대한 열의가 있는 참가자가 많이 참여했는데 그 참여자들이 많이 배우고 통일에 대한 큰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요즘같이 청년들의 통일 공감대가 없는 시대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귀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같고요. - 박나은(지원 3)

인터뷰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자신의 활동 분야와 무관하게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혼자가 아님을 느낄 때 더욱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민족이자 협력의 대상이지만 경계의 대상이기도 한 북한과의 아이러니한 관계 속 두 분야 모두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앞서 1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의 5·24

조치, 유엔의 강화되어가는 대북제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일들로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의 활동은 침체에 접어들었고, 이는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에 새롭게 유입되는 활동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미군사연합훈련을 하면 이제 한숨, 한숨이 길어지죠. ...5·24조치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실무자들은 (방북해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는) 추억이나 경험이 없는 거죠. ...남북 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은 들어갔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는 완전 국경이 봉쇄됐잖아요. 진짜 손 놓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무력감이 좀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일 왜 하나? 그거 북한 핵 개발하는 데 쓰이는 거 아니냐? (북한에)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좀 힘이 빠지죠. - 김유진(지원 2)

정치와 인도적지원을 따로 봐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모든 것은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심각한 인도적 상황으로 인해 대북지원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이 막힐 때 힘이 빠져요. - 이찬범(지원 1)

북한인권 분야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지만, 그 중심가치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면서 색안경을 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내야 했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북한인권이 마스크에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 그 이미지에 따라서 (북한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리 이미지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북한인권이라는 주제 자체가 정치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색안경을 쓰고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때 (이 활동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본래의 목적과 자꾸 다르게 흘러가니까요. - 강하영(인권 3)

제가 2018년도에 한번 퇴사한 적이 있어요. 2018년 그쯤에 정상회담을 많이 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너무 큰 실망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김정은에게 그냥 막 아무렇지 않게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이 사람(김정은)이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행위를 허락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실망이 커서 한국에서는 북한인권 활동을 못하겠다. 하려면 해외 나가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가장 힘들었고 아직까지도 다른 것보다 북한인권이 정치화되었고 북한인권을 진짜 인권으로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영국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 유정아(인권 2)

우리가 북한인권 일을 하면서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걸 말도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또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정치 색깔을 묶어서 바라보면서 전화테러를 한다든지 공격하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마다 좀 되게 많이 힘들죠. 다 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고. 당연히 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인신공격을 할 때는 좀 많이 다운되죠. - 김규민(인권 1)

인터뷰 참여자 중 유일하게 북한출신인 김규민(인권 1)은 자신의 출신과 북한인권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이중의 선입견을 마주해야 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은 이렇다 얘기할 때마다 더 힘이 더 들긴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해봤자 너는 도망 나왔으니까 당연히 안 좋게 말하겠지. 그건 너의 주장이겠지. 아니면 또 북한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 이렇게 말할 때는 좀 힘이 빠지긴 해요. 제가 도망 나왔으니까 당연히 북한이 더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다른 나라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인권 후진국이 많잖아요. 이들 국가보다도 좀더 못한 게 북한이라고 저는 살아봤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어쨌든 저의 주장일 뿐이라서 힘들 때가 많죠. - 김규민(인권 1)

분야와 상관없이 각 활동가가 놓인 상황은 달랐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느리더라도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고 북한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보였다. ‘사람’이 활동가들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거나 빼기도 했다. 이 모든 활동이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활동이기 때문이 아닐까.

3. 우리의 같음과 다름¹¹

앞서 1장에서 우리는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가 추구해온 활동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두 분야 사이의 대립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주제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인권’에 관한 인식,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책 쟁점’에 관한 활동가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1) 인권에 관한 인식

개별인터뷰 첫 질문은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질문이다.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한 논쟁은 ‘인권’을 다룰 때 항상 함께 논의되는 쟁점이다.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모두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기에, 다른 질문을 하기에 앞서 각 활동가가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Q: ‘인권은 어떠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각 사회의 역사·문화적 전통에 따라 각 문화의 규범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대북 인도적지원과 북한인권 활동가 사이에 유일하게 동일한 응답이 나온 질문으로, 두 분야 활동가 모두 인권의 보편성이 특수성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논조는 북한인권 분야에서 더 강하게 드러났다. 몇몇 활동가는 인권의 보편성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이긴 하나, 특수성에 관한 고려도 일정 부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1 이번 절에서 서술한 ‘우리의 같음과 다름’은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 개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각 활동가의 의견이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전체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김규민(인권 1), 강하영(인권 3)의 경우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개념이자 천부적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찌됐든. 사람은 사람으로서 귀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자유,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는 제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치적 특수성 때문에 제한한다. 이거는 그 정치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인 거지요. - 김규민(인권 1)

저는 기본적으로 세계인권선언문을 믿는 사람이고 이 인권의 보편성을 믿기 때문에 헌장(세계인권선언문)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인권 문제는) 체제와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인데, 그거를 뭘 인정을 하고, 이렇게 뭘 개선의 방안으로 나가는 것은 일시적인 개선은 이뤄질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보편적인 가치를 계속 추구해서 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 강하영(인권 3)

유정아(인권 2) 활동가 역시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인권의 보편성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맞으나 유엔 헌장이 만들어질 때 서양, 백인국가 위주로 만들어지는 등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고민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no matter what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북한인권)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그렇게 시작은 해야 하는 거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게 어렵고, 또 인권이라는 게 사실 그... 유엔의 Universal declaration(유엔헌장)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유엔헌장이 1945년도에 만들어진 게 미국에서 거의 백인과 서양 국가가 모여서 만든 문서여서, 모든 국가, 모든 문화를 생각하고 만든 다큐먼트는 아니라는 것을 점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 유정아(인권 2)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도 대체로 인권의 보편적 성격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인권의 보편성이 모든 문화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그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하면, 보편성에 좀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생명권이나, 뭐 자유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침해되지 않아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박나은(지원 3)

인권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즉 생존이 달려 있는 부분은 지역 및 문화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각 사회의 변화 시점이 다를 것이고, 각기 다른 방법 및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모든 사회에 같은 것을 강요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 이찬범(지원 1)

김유진(지원 2) 활동가는 단체 내 상급자와 자신의 시각과 비교하며,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의견을 냈다.

저는 굳이 고르자면 국제법,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 단체에 높으신 분 중에 북측에 많이 다녀오신 경험담을 이야기 하시면서 ‘북한에도 좋은 게 많다. 우리보다 공동체의식도 많이 살아있고, 우리가 배울 것들이 너무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너무 그 안에서 그 국가 내에서 통용되는 것과 그런 작은 규모로 봤을 때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유진(지원 2)

인권의 특수성에 관해서는 활동가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문화적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인권 탄압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문화적 특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 인류사를 통틀어서 ‘인권’을 합의했다는 거를 보면 인권은 특수성으로 무마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

거든요. (북한을) 아주 전체로만 보면 어쨌든 ‘극장국가’로 불리잖아요. 굉장히 촘촘한 감시망과 탄압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특수성으로 무마하기에는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유진(지원 2)

무조건적으로 상대성을 인정하기에는 조금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나은(지원 3)

북한 출신인 김규민 활동가는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인권의 특수성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성이라는 것은… 북한 내부에 대해 정확히 어떤 특수성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북한의 특수성이라고 해 봤자, 저는 뭐 한국에 있는 북한학 사람들이 개념을 씌워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 특수성이라는 건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냥 통제하고 싶으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들으라고 통제하는 거예요. 인권과 자유 앞에서는 특수성이라는 것을 대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의 인권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제약하겠나? 이것은 아니죠. - 김규민(인권 1)

인권의 보편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데 모든 활동가가 동의했지만, 분야별로 인권의 보편성이 절대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이찬범(지원 1)의 경우 보편성이 모든 문화를 획일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유정아(인권 2)는 북한은 ‘보편적 인권’이 통용되는 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북한 관리자들도 인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개선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북한 내부 상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편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각 사회의 변화 시점이 다를 것이고, 각기 다른 방법 및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모든 사회에 같은 것을 강요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찬범(지원 1)

저도 이제 북한이 (인권에 대해) 모를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요, 예를 들어 marital rape에 대한 개념을 북한 대표들이 몰랐잖아요. 그 definition을 몰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에서 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유정아(인권 2)

활동가들 사이의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인식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은 앞서 1장에서 북한인권 단체들이 주로 인권의 보편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모두 인권의 특수정보보다는 보편성이 궁극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다만,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은 궁극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지원해야 하나, 북한의 시급한 인도적 문제 앞에서는 북한과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북한 주민을 지원하고 북한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인권의 보편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가치이고 그런 가치는 북한의 권력 구조, 시스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북한 정권과 주민에 관한 인식

Q: 북한 정권,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질문이다. 두 분야 활동가 모두 북한 정권은 ‘김씨 일가와 주변 최고위층’으로, 북한 주민은 ‘피지배계급, 일반 주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적으로 평양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그 노동당 그 회의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진짜 핵심 인사들까지라고 생각해요. - 김유진(지원 2)

관리자들은 당이겠죠. 당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겠죠. 보위부도 될 수 있고. - 김규민(인권 1)

북한 주민은 북한의 모든 피지배층, 김정은 및 주변 최고위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찬범(지원 1)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북한 정권의 범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는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 정권을 북한의 인권 유린 실체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유린의 가해자 범 위 설정에 더 민감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을) 너무 넓게 보면 힘드니까 딱 김씨로 지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일인 독재체제이고, 그 독재 때문에 이제 밑으로 영향이 가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범인을 딱 정한다면 김씨 일가 딱 거기까지만일 것 같아요 - 강하영(인권 3)

당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점점 엘리트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같이 갈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 그분들 타겟으로 또 프로젝트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유정아(인권 2)

활동가 사이에서 가장 큰 견해차가 나타나는 부분은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은 논조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북한 정권을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정부와 주민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다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눠서 바라보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 주민들과) 원하는 게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국 정부도 똑같잖아요? ‘한국 정부 악

간 미쳤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됐다. 하지만 하나 하나 뜯어보면 정상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하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다 정도? 그렇게 막 예전에 있던 교육들 ‘북한 주민들, 우리가 수복해야 할 대상이고 북한 정권은 무조건 나쁜 놈들’ 이렇게 보면 그게 얼마나 설득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김유진(지원 2)

정권은 어렵지만 협력해 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권이, 특히 우리는 대북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자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려면 정부가 꼭 필요해요. 정부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협력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 박나은(지원 3)

반면에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북한 정권은 교체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확실하게 노예주인과 노예. 이런 관계라고 봐요 나는. 그니까 노예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당연히 김정은이겠죠. 노예는 당연히 북한의 주민들이고, 노예를 감독하는 감독관들, 관리자들은 당이겠죠. - 김규민(인권 1)

북한 정권 같은 경우는 무너져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김씨 체제가 변화돼야 그런 인권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때문에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 강하영(인권 3)

활동가 사이에 이러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 분야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의 경우 북한 정부가 사업의 파트너이기에 협력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앞서 1장에서 살펴봤듯이 북한인권 분야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북한 정부의 독재 세습체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인권 인식

Q: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 내부와 외부에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에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북한인권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으로, 활동가들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인터뷰 결과, 두 분야 활동가 모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정보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설정한 ‘정보의 자유’의 의미는 달랐다.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이 말하는 정보의 자유란 북한 내부의 정보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자유가 북한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북한 주민의 생활권 향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정보의 교환만 이루어져도 좀더 나아질 수 있겠다. 그거의 자유가 생기면 아주 급속도로 변하겠고, 나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제재가)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농 격차도 매우 심하고, 그리고 뭐 드라마는 불지연정, 국가데이터는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수준이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솔직히 볼 수 없고, 그래서 정보 접근성만 좀 달라져도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정보 접근성이라 함은 단순히 이제 어떤 추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내가 어디 가면 지원받을 수 있다더라’,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들의 먹고사는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 김유진(지원 2)

반대로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에게 정보의 자유란 ‘외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다. 외부의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체제가 잘못되었고 북한과는 다른 세상도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정보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여 북한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또는 체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외부 정부를 많이 보는 것밖에 없어요. 외부의 정보를 많이 보고,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많이 보고 하면서 ‘외국에서는 저렇게 살아도 국가에서 뭐라고 안 하네’라는 걸 느낄 때, ‘아, 저게 자유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 저기 되게 자유롭다 진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해 알게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해주면, 그럼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보가 많이 넣어주는 게 필요하죠. - 김규민(인권 1)

정보 유입에 관한 두 분야의 견해차 외에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생활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북한의 사회적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이 북한의 인권을 대체로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사회권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단 북한 내에서는 대개 수도나, 비수도 지역에 많은 격차가 존재하잖아요. 제가 듣기로 시골 지역에는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책을 지금도 사용한다든지, 아예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정부의 그런 지원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북한인권이 개선되면) 이러한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그건 정부에서 시행해야 할 것 같지

만. 그런 사회적인 차별이나 격차, 이런 게 좀 해소되어야 할 것 같고, 외부에서는 이제 북한 자체가 인프라 같은 것을 개선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국제기구나 북한이 허락한다면 각각의 정부가 협력해서 수도나 도로, 적정 기술 같은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박나은(지원 3)

반대로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국제사회를 의식하는 북한 정권의 특성을 이용해 외부의 압력을 통한 접근법이 북한인권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할 때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 인권 개선을 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2013년 설치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해지고, 이후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활동가들이 언급한 탈북민의 증언들은 주로 정치범 등 수감자의 처우 개선, 고문 수준의 감소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인권규약에서 자유권적 권리, 즉, 생명권과 관련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중심으로 인권 이슈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엔 그 내부 안에서 변화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 본인들이 인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바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구금자들이 언젠가는 탈북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사실들이 외부에 알려졌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서 조금씩 바꾸는 게 근본적인 변화는 정말 없지만 조금씩 바꾸는 게 있기에 때문에, 그나마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국제 옹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 강하영(인권 3)

예를 들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수감자들에게 담요를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뭐 먹을 것을 거의 안 주던 것을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준다든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꽃제비에 대해서 계속 말하니깐, 꽃제비 애들을 다 모아서 수용소에 가둬놓긴 했지만, 어쨌든 관리하려고 하는 모

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시민단체들이,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하니깐 어느 정도 하는 시늉이라도 보이니까. 그러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괴롭힘을 덜 받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스트레스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그런 기본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외부의 우리들의 역할이겠죠, 외부에서 계속 정부를 압박하고 하는 게. - 김규민(인권 1)

또한 이번 질문에서는 북한 정권에 관한 인식차이가 다시 한번 드러나기도 하였다.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의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음을 인식하나,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북한 정권이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북한의 체제 전환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인권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인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아예 체제 붕괴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 강하영(인권 3)

북한 정권이 개인적으로는 전략을 다르게 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 정권이)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바꿔야 좀 살 만해지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통제가, 통제 안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 김유진(지원 2)

이처럼 북한인권 이슈에 관한 각 분야 활동가의 인식 차이는 각자의 활동 분야에 기반해 북한인권을 이해하는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는 북한 내부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반대로 북한인권 분야는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업무에 주력하기 때문에 각각 ‘북한의 내부발전’과 ‘국제 사회를 통한 압박’ 등, 두 가지로 접근법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4) 대북정책 인식

국내의 대북정책은 각 단체의 주요활동(대북 인도적지원,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정부 압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네 번째로 설정한 질문은 대북정책과 관련된 질문으로, 두 개의 세부질문을 통해 각 분야 활동가들이 대북 인도적지원과 대북제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1)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협력적 접근과 북한인권

Q: 대북 인도적지원 혹은 북한에 대한 협력적인 접근이 북한의 인권개선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북정책과 관련한 첫 번째 질문은 대북 인도적지원과 북한에 대한 협력적인 태도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활동가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설정한 질문이다.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은 대북 인도적지원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 역시 인도적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인도적지원이 북한의 근본적인 인권 향상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야별로 활동가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먼저,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은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인 만큼 모두 인도적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활동가들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시급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냈고, 북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인권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사람들의 선택권을 좀 늘려주고,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살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유진 (지원 2)

인도주의적 지원 자체가 어쨌든 목적이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해 주자, 이런 거 자체가 인권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북한 사람들도 사람으로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고 사람으로서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러한 최소한의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 주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조차 인권에 크게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나은(지원 3)

인도적지원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워질 때 북한 주민의 인권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찬범(지원 1)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북 대북 인도적지원이 단순 식량지원에 그친다면 한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활동가로서 지원물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고민이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이 대북 인도적지원에 우려를 표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단순히 남한 혹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는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식량문제 및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뤄져야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찬범(지원 1)

만약 지원물품을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아 진짜 나쁜 놈들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이제 내전이나 여러 가지 전쟁 상황에서 그랬던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북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인간의 일말의 아주 기본적인 ‘인도(仁道)’, 사람이려면 갖춰야 할 그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 김유진(지원 2)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대북 인도적지원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활동가들은 북한의 인권 개선의 목표를 북한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지원 같은 활동이 일시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정한 인권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은 지원 물품이 주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없는 체제여서 인권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지원해주면, 쌀값이 조금 떨어진 경우는 있었어요. 뭐 착복을 하든 어쨌든 시장에 풀리니까요. 근데 그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는 아니고요. 뭐 천 원 하던 쌀이 오백 원 되는 정도는 아니고. 많이 떨어져봤자 백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아시듯이 외부에서 주면, 안 좋은 쪽으로 쓴다. 주민들에게 주지도 않고 쓴다. 그 말도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지원 물품을) 받으면 뭐 많이 생기니까 장에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이 생기니까 위에 간부들이나 좋지. 사실은 밑에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어쨌든 진퇴양난인데, 이걸 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도 사실 답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인도적 지원으로 준다고 하면, 쌀 이런 것보다는, 식량을 그냥 나눠주면 중간에서 착복하니까, 차라리 진짜 그 사람들이 아예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두유라던가. 그런 것들을 아예 주게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 김규민(인권 1)

인권이라는 게 단순히 뭐 신체적인 그런 폭력? 이런 것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든가 모든 권리를 다 포함하고 있고, 교육에 관한 권리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만약에 의식주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는 지원이 과연 인권이나 인권에 대한 가치, 의식? 이런 게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듣지 않아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제공을 받는다, 의식주 해결이 된다, 이렇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람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또 서로서로 존중하고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감시체제에 있고. 그런 것들이 인권하고 관련이 있을까? 인도주의적 지원

이 영향을 미칠 순 있겠죠. 근데 개선, 뭔가 증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요. - 강하영(인권 3)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북한의 체제적 문제를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대북 인도적지원이 북한인권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북 인도적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북한의 시스템적 한계 속에서 지원 물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건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대북제재, 북한 정권 압박 접근과 북한인권

Q: 북한의 인권개선과 대북제재가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북정책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인권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의 응답은 앞선 대북 인도적지원에 관한 응답과 다르게 활동가 간 의견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은 대북제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두 확고히 밝혔다.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의 생활만 더 나빠질 뿐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북한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데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북제재에 따른 활동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기도 했다.

일단 대북제재가 심해진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감시와 탄압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소리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들의 어떤 통치체제를 인민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이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자기들

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터득했어요. ‘굶을 지언정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인구를 몇 프로 줄이는 한이 있어도 생존할 수 있다.’ 이미 경험적으로 그들은 터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대북제재가 통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 김유진(지원 2)

대북제재로 인도적 대북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선 주민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의 생존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찬범(지원 1)

대북제재가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열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두 개밖에 못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업) 가능성의 폭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 북한에서 대개 치아 치료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장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드릴이라든지. 그런 것조차 이제 들어가기 어렵고, 많은 제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 박나은(지원 3)

반대로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주목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압박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저는 사실 지원보다는 제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북한 정부는. 어쨌든 김정은도 되게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막 뭐라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듣거든요. 쪽팔려서도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당연히 내부에서는 시늉만하다 말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대단한 발전인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제재 조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민(인권 1)

북한 국가 자체가 폐쇄적인 국가인데 그러면서도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그걸 또 이용하는 국가기 때문에 그게(대북제재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 강하영(인권 3)

다만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의 생활이 나빠진다는 데 동의하고, 대북 제재 정책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으며,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였다.

네, 그게 참 딜레마긴 한데, 맞는 거 같아요.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힘이 드는 것도 맞고, 이제 일반 주민의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 강하영(인권 3)

인도주의 단체들이 하는 일이 인권이다, 인권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인권에 생존권, 식량권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단체들이 경제제재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재가 완화되면, 국경에 있는 분들이 좀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정보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조금 더 개선되면 사회에도 그게 더 퍼지니까. ...뭐, 바로 직설적으로 말은 못 하더라도 조금씩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 제재를 완화하는 게 정보의 자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유정아(인권 2)

두 분야 활동가 모두 자신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정책에 긍정적이었다.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는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하며, 북한의 수감자 처우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도 지원 물품이 북한 주민의 실생활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상대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대북 인도적지원이 단기적 처방에 가까우며 궁극적인 인권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은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을 더 나빠지게 한다고 판단하였다.

두 분야 활동가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정책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 역시 대북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나타냈다.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 역시 인도주의 물품이 북한 주민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없는 현실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활동가 모두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활동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 국제인권규약 인식(자유권, 사회권)

Q: 활동가님 개인적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에 ‘자유권’과 ‘사회권’ 중 어떠한 권리가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¹²

마지막으로 설정한 질문은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이루어진 국제인권 규약에 관한 활동가들의 인식이다.

모든 활동가가 두 권리(자유권과 사회권)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더욱 어려워하였다. 활동가들이 답변을 어려워하긴 했지만 활동가들 모두 대체로 자유권이 보다 근본적인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실제로 북한의 현실에서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는 답변의 차이가 있었다.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모두 어렵지만 그래도 자유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 사이에서는 의견

12 이 질문에서 말한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호보완적인 권리로,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시킬 수 없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이에 대해 주지하였으며 활동가들도 두 권리가 모두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두 분야 활동가의 생각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각 권리가 49:51의 차이를 보인다면 그래도 51의 비중을 가져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이 통일되지 않고 차이가 있었다. ‘북한의 실상을 고려해 사회권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자유권이 그래도 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김유진(지원 2), 이찬범(지원 1) 활동가는 북한의 현실이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렵고, 이러한 상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먼저 식량권 같은 사회권 관련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먹고사는 문제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데 라면도 없고 쌀도 없어. 너무 비참하잖아요. 자유권의 임계점은 위쪽에 위치한다면, 사회권의 임계점은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 같아요. 이 욕구(사회권과 관련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서러움과 비참함을 아무도 겪어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권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 김유진(지원 2)

어렵지만 사회권이 좀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봐요. 북한에서 자유권이 먼저 실현될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사이에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 이찬범(지원 1)

김유진(지원 2) 활동가는 사회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유권 같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인간이 먹는 걸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식량이라든가, 주거 같은 문제를 다루고 싶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자유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자유권은 좀 탈북한 친구들을 만나면 많이 느끼거든요. 그 친구들이 사실 거기 있으면 먹고살 수는 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살 만하니까 산다’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는구나.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기 위해서 그걸 갈구할 때가 오는구나 싶어요.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 김유진(지원 2)

박나은(지원 3) 활동가는 이찬범(지원 1), 김유진(지원 2)과는 다르게 자유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밝혔다. 박나은(지원 3) 활동가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특성을 언급하며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가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선택이 있으므로 자유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국가가 어쨌든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보면 존재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유권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유가 개인한테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나은(지원 3)

이처럼 연구에 참여한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은 자유권과 사회권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에 있어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다른 질문과는 다르게 이 질문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은 개인의 성향 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자유가 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제가 자유를 약간 중요시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게 먼저인 거 같아요. ...저는 또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 박나은(지원 3)

저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 현재로서는 그런 사회권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저의 현실적인 성격이 반영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꿈을 쫓는다?' 그러면 괜찮나? 그런 생각, 현실적인 관점이 반영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유진(지원 2)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 역시 자유권과 사회권이 북한에서 동일하게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자유권’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자유권에서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가 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사회권 역시 중요하지만 사회권은 자유권보다는 단기적인 목표라는 인식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

사람한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 살 수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장 해결되는 거는 많지 않아도 빅픽처를 그리며 일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당장 식량 문제 같은 것을 바로 해결하면 몇 년 동안은 사람들이 ‘아, 북한 이슈가 해결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래는 못 갈 거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냥그냥 대일밴드 막 붙이는 게 아니라 큰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 그런 게 뭐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어렵네요. - 유정아(인권 2)

자유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유가 보장되면 사회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배부르게 사는 것도 나에게 자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권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규민(인권 1)

자유권과 사회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래도 인권을 한 60, 사회권을 한 40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에 이끌리고 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의식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더 갈망해 왔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자유권과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때 인권이 더 잘 지켜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런 모든 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자유권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 강하영(인권 3)

4. 우리 안의 같음과 다름

1) 우리의 같음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모두 사람을 통해 북한,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각자 만났던 사람들은 다르지만 모두 누군가와와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관심이 직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동시에, 일하며 만나는 사람들이 보이는 관심과 기대의 눈빛, 감사의 말 등, 사람에게서 일을 지속하는 힘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분야 활동가들 모두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선입견 어린 시선을 받을 때, 정치적 변화가 본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때 활력을 잃게 된다고 응답했다. 한국에서 북한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러한 관계성이 시민사회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사회 분위기가 정치적 이슈에 따라 변화할 때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동가들이 가지는 또 다른 공통점은 ‘인권의 보편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활동가들 모두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각 사회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권의 상대성보다 인권의 보편성이 궁극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 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연구진들은 활동가들에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물었다. 활동가들 모두 북한 정권은 북한의 핵심 권력층인 김씨 일가로, 북한 주민은 당국의 통제를 받는 일반 시민들로 생각하고 있었다.

2) 우리의 다름

두 분야 활동가들의 다름은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책 쟁점을 물어본 거의 모든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3절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에 관한 우리의 생각’에서 확인한 각 분야 활동가들의 의견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0>¹³과 같다.

<표 10> 우리의 다름

질문	북한인권	대북 인도적지원
북한 정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무너져야 하는 또는 교체되어야 하는 대상	협력해야 하는 대상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국제적 압박,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북한 내부 생활 환경의 개선, 북한 내부의 정보 공유 활성화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에 관한 협력적 접근의 관계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나 궁극적인 인권 개선에는 한계가 존재함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됨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제재의 관계는?	부작용이 있으나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됨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됨
북한인권 개선에 더 도움이 되는 권리는? 자유권 vs 사회권	둘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자유권	둘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회권 2명, 자유권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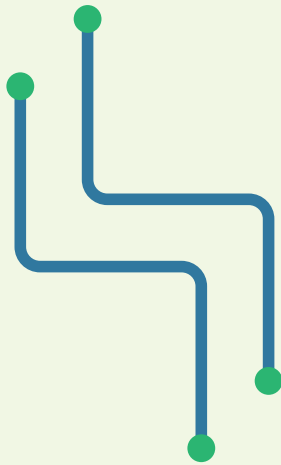
13 <표 10>에 작성한 내용은 인터뷰에 응답한 활동가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두 분야 사이에 발견되는 차이점은 1장에서 살펴보았던 각 분야의 지향점 차이와도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대체로 북한 정권을 무너져야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제재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인도적지원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국제인권규약에 언급된 권리 중 자유권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은 북한 정권을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북한인권 개선에도 대북제재와 같이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협력적인 접근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국제인권규약에서도 북한 내부 인프라구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권규약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활동가들 간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각 분야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을 북한 정부의 폐쇄성에서 찾고 있으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국제 캠페인 활동을 해왔다. 그렇다 보니 북한 정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북한 정권에 의해 제한된 주민들의 자유권적 권리를 향상하는데 우선권을 둔다.

반면,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은 북한 내부에 지원물자를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또한, 대부분의 단체가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이라는 민족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을 협력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으며, 단체의 활동들도 북한의 내부 인프라를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권적 권리를 향상하는데 우선권을 둔다.



3장. 앞으로의 우리는?

: 북한인권·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의
미래 그려보기

3장에서는 1:1 인터뷰로 만났던 모든 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여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나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들 퇴근 후 밥도 먹지 못하고 조금은 지친 모습으로 시작한 온라인 모임이었지만,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활발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 주셔서 예정했던 시간보다도 30분이나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터뷰에 참여해 준 활동가들이 나눠 준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려본 협력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장에서 나온 우리들의 이야기가 모임에 참가한 활동가분뿐 아니라 아직 만나보지 못한 다른 분에게도 널리 퍼져 더 많은 활동가의 고민을 모아내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비가 내리던 날 퇴근 후 온라인으로 모인 활동가들의 모습은 어색함이 가득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른 거리감과 동시에 평소 교류가 적었던 분야의 활동가들과 만난다는 것 때문에 더욱 어색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각자 자신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어색함이 사라졌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자신의 주요 업무 소개를 한 후 연구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대화는 두 분야 사이 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개인의 생각과 2030세대로서 우리의 역할과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눴다. 이후 가깝지만 멀게 느껴졌던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이 모여 짧게나마 서로가 느꼈던 점을 나누고 마무리했다.

1. 우리의 역할 : 변화를 이끌어내는 Change Maker

시민사회가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2030세대들 또한 자신들의 개성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2030세대인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자기 소개 후 풀어진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Q: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 2030세대 활동가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국가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철학과 담론을 굉장히 풍성히 뽑아냈으면 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활동가들이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또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시각을 전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김유진(지원 2)

이제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과 하나가 되는 연습, 탈북민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대중과 나누고, 이런 역할이 조금 중요할 거 같아요. - 박나은(지원 3)

시민사회는 곳곳에서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고,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로서 북한인권 단체는)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캠페인을 펼치고, 인권 피해와 실태를 조사, 기록 등 미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온 북한 주민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지원과 교육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수록 북한 주민도 우리랑 똑같은, 우리가 남한이랑 똑같은 사람이, 그런 자유를 누리며 이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영향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유정아(인권 2)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활동가들은 시민사회가 대중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2030세대의 활동가들이 MZ세대, 즉 80년대에서 2000년대 생을 아

우르는 새로운 세대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젊은 세대와 50대 이상 세대를 이으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MZ세대)이 여기서(시민단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 활동,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것 또는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한 지지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각 분야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도 사실은 계속 오래 하면 변하잖아요? 그렇게 같이 프로젝트도, 사람도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 강하영(인권 3)

근데 이거는(북한, 통일 관련 주제) 특별히 2030세대는 이제 우리 윗세대의 활동가들의 그 어떤 한 민족에 대한 그리움 애투함, 정과 현재를 살아가는 MZ세대의 감성을 다 아울러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융화될 수 있게 어떻게 둘의 입장과 둘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게 2030 활동가들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유진(지원 2)

(윗세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2030들은 어쨌든 ‘탈북민과 우리는 다르지 않아, 우린 같은 사람이고’ 이러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들이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쨌든 차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탈북민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생각을 (2030세대에게)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인권 향상을 위해서 되게 좋을 거 같아요. ... 편견 같은 걸 좀 없애는 역할을 오히려 2030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40~50대분들은 이런 편견, 이런 게 아예 다 이미 많이, 너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서, 편견을 없애는 역할은 2030세대가 매체나, 미디어나 영상, 글 뭐 이런 걸 통해서 문화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박나은(지원 3)

2030세대는 아무래도 (윗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정보의 바다 속에 살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고. 그리고 2030세대는 또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아이디어가 많고 유연하고 상황에 대해서 되게 원칙을 따지는 부분이 좀 덜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딱딱하게 여겨지는 북한을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능력이 2030세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 김규민(인권 1)

인터뷰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새로운 문화에 열려 있는 마음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은 2030세대에 관한 기대감과 함께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에 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2030세대의 활동가로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치열한 고민은 당연시되는 것 같았다.

Q: 2030 활동가로서 같이 고민해야 하는 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는 북한인권 단체들과 그 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있어서는 대북지원과 북한인권이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비록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더 알아가야 할 분야, 실무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찬범(지원 1)

대북 인도적지원과 인권은 항상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지금 얘기를 나눌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잘해 주셨지만, 2030세대는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하고, 옛날 방식이 아닌, 지금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요즘 상황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먼저 길을 걸으셨던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고 그분들에게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시대는 계속 변하니까, 변화에 맞는 활동과 변화에 맞는 연대·지지를 계속하기 위한 실무자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고민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 강하영(인권 3)

개인적으로 정치를 뛰어넘는 공동주제가 무엇일까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인식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나 진보나, 정치이든 언론이든, ‘어디든 비판받지 않고 공통적인 정서를 끌어낼 수 있는 공동주제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을 끌어낼 수 있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울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지? 그게 가장 고민이 많이 되고 고민하고 있고 또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북측의 눈치도 안 보고 남측의 눈치도 안 보고 그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 김유진(지원 2)

인권과 북한에 관한 서로 다른 시각,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북한의 행보 등으로 인해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활동가들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 사이 균형을 잡는 방법 등 다양한 고민이 동반할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활동에 관한 고민과 더불어 두 분야가 함께 나아갈 방법에 관한 고민이 있었다.

현재의 2030세대는 두 분야를 이끌었던 세대와 새롭게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세대로 두 분야가 나아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윗세대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참여자들이 언급한 고민을 나누고 각 분야가 지향하는 가치가 변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동료들과 소통과 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길고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

북한인권과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는 같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향 가치, 관점, 북한관 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두 분야 모두 분명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흑백논리가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북한인권·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정말 협력 가능할까요?

앞서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북한과 관련된 분야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두 분야 정말 협력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두 분야가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없었을까?

Q: 활동가 여러분, 북한인권·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정말 협력 가능할까요?

(협력의)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추측하건대, 실무자가 바뀌면서 관심이 없어지거나 연락이 끊겨버리면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각자 너무 일이 바쁘니까 다른 것 신경 쓸 여유가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멀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야 모두 생각은 있는데 실천이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 이찬범(지원 1)

대북 인도적지원의 경우에는 북한 정부랑 상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북한인권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담화가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이 부분(북한인권)도 중요하고, 같이 고려를 해야 해. 뭐 같이 논의해 보고 포럼을 해 보고 연구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북한인권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논의를 할 기회조차도 이제 단절이 된 거 같아요. 조금 흑백논리처럼.... - 박나은(지원 3)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이 북한인권 단체들이랑 같이 일 할 경우에 북한에 들어갈 기회가 많이 없어지게 되고, 또 북한에 들어가도 감시를 더 많이 받는다고 들어서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두 단체가 협력하면 이제 북한이 대북지원 단체들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북한 아니어도 한국에 와서도 자유롭게 (북한인권 단체들과) 교류를 못 하는 거 같아요. - 유정아(인권 2)

협력이 어려웠던 이유로 활동가들은 많은 업무량과 실무진의 변경, 그리고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었다. 북한 내부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단체들과의 대화 또

는 협력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개적인 담론을 형성하려고 하기보다는 “비공개로 점진적 접근”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두 분야의 단체가) 1:1로 만납니다, 하는 게 공식화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북한인권 단체랑 대북인도적지원 단체가 모여 전략적 제휴가 아닌 서로에 대해 알아가 보자, 이런 식으로 알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비공개로 모이면 수도 없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비공개 간담회를 시작하면 그런 게 첫 시작이지 않을까요? - 이찬범(지원 1)

일단은 각각의 성향과 입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가 북한인권 분야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의 입장은 이렇고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인권이랑 국제개발 협력을 같이 접목해서 같이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 박나은(지원 3)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서 협력 가능할까요? 무언가 결론을 내리기 전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Q: 두 분야의 협력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어디서부터 협력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통일과 관련된 캠페인 같은 부분을 협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고 너의 이야기야’라는 생각을 저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일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나뉘어 있어서 통일 같은 경우는 (두 분야의 단체들이 협력해서) 좀 정치 중립적,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박나은(지원 3)

협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 분야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육 분야..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북한에 관한 교육이나 뭐랄까 이런 이슈들을 알리고 싶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분야가) 목적과 접근 방법이 다른 상태이니 같이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북한에 관심이 있거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경우에, (북한에 대한) 적화된 입장을 배제하고 사업만 알리는 교육활동을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활동의 목적과 접근법이 아예 달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키가 돼서 같이하게 된다면 좋을 거 같아요. - 강하영(인권 3)

저는 가장 좋은 건 교육일 것 같거든요. 교육은 그렇게 방향성이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이 아주 많고 연구도 많고, 커리큘럼도 많잖아요? 그리고 통일교육 관련한 협의체에 함께 가입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를 꼽자면, 뭐 약간 실태조사를 갈 때 양측이 같이 가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북한을 조사하고 이럴 때 협력하면 잘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교차점검이 굉장히 날라롭게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유진(지원 2)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같은 국제적인 메커니즘 안에서는 같이 협력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 단체에서 SDGs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국내 인도적지원/교류협력 단체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북한이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제출했을 때 교류협력이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권고안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게 많이 연락했었는데, UPR안에서는 되게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메커니즘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 유정아(인권 2)

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교육 분야와 통일, 그리고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국제적 차원의 담론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가 제시하는 어젠다보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주제를 중심으로

로 협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활동가는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남-남 갈등, 즉 국내 ‘북한’에 관한 정치적 대립과 많은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북한’ 이기에 협력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는 협력이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이 북한인권 단체들이랑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 북한이 지원을 거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협력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한 번 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호주 출신의 북한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랑 같이 활동하고 싶은데 절대 노출 안 되게 해 달라고 말했었어요. 북한에서 거부한다고.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른 것도 있고, 북한은 모든 것을 정치적 행위를 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 김규민(인권 1)

활동가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두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관해 다른 생각을 이야기했다. 많은 활동가가 두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협력한다면 교육 또는 국제 기준과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들의 말처럼 달라만 보이는 두 분야가 협력하기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협력을 시도한다면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두 분야 활동가들의 첫 만남, 그리고 가능성

두 분야 활동가들의 첫 만남은 어색함이 많았다. 하지만 이 시간은 곧 서로를 응원하고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할 수 없었기에 아쉬움이 컸지만 반대로 이 아쉬움이 다음 모임을 기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단 저는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에 대해 ‘쓸데없는 일을 한다’, ‘복한 정부만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해서 오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그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게 다 맞지는 않구나라는 다른 생각도 했고 나와 다른 방법으로 좋은 일을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윗분들의 눈치 때문에 이렇게 좀 못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서로 실무자들끼리 상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또 응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고 또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규민(인권 1)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의 다른 활동가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북한인권 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뵈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면서 우리도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랬으면,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KHR(연구진)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건이 가능해지면 우리 대북 인도적지원 파트에서도 여러분을 초대해서 이런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찬범(지원 1)

저도 (이 시간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대북 인도적지원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해 주시니까 재미있게 잘 들었던 것 같고 특히 모니터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적인 문제의식과 생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더

라도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면서 지내면 나중에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정보 교류와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정보 교류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뭐랄까, 제가 북한인권과 북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대북 인도적지원 관련된 단체라든가 뉴스 기사라든가 이런 걸 거의 찾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북한인권 분야에 대한 유엔 보고서들, 해외 국회의원들이나 해외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읽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대북 인도적지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나 다른 곳의 어떤 정보를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려는 시도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들어가서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 유정아(인권 2)

저도 일단 한 대상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람을 향한 일인데,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졌지만 다른 방식과 다른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서로를 배척하거나 좀 불편해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들의 방향성과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고. 좀 궁금한 게 아직 사실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꼭 다시 한번 뵙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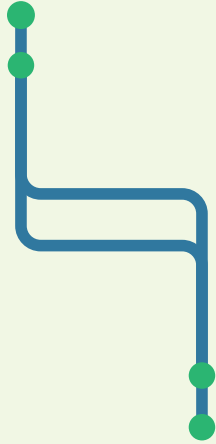
그리고 (이번 만남을 통해) 좀 바뀌었던 거는, 사실은 약간 쪼그라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북한인권 단체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무작정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짜 모르셨구나라는 걸 알게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과는 좀 다른 완전 새로운 판을 좀 짜도 재밌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 김유진(지원 2)

북한과 관련된 주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다. 자주 변하는 대북정책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거나 국민 정서가 변화함에 따라 각 분야의 활동에 관한 시선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두 분야는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분야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활동가들 사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비대면 모임을 통해 서로에 관한 오해와 궁금한 점을 풀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2030세대 활동가들의 역할을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체인지 메이커로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활동가들은 2030세대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통일’, ‘북한인권’, ‘대북지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념적 이미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며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두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고 커피 한잔하듯 가벼운 대화를 시작으로 소통의 범위를 넓려 가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어느 정도 서로에 관한 이해가 쌓였을 때 협력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력 방안을 함께 찾아가길 기대해본다.



에필로그 :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장장 7개월간의 연구가 드디어 끝을 맺었습니다. ‘커피 한잔할래요?’라는 팀명처럼, 가볍게 고소한 라떼 한잔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연구 과정은 카페를 개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진이 건드려 버린 ‘북한’, ‘인권’, ‘대북지원’의 세 가지 원두는 로스팅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에 함께 참여해주실 활동가들을 모시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이 세 가지 주제를 잘 알고 있어야 했는데, 각각의 주제가 워낙 방대해서 문헌연구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연구를 끝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궁금한 건 못 참아-’라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시작부터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두 분야 모두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데 왜 협력하지 못할까?’였습니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는지, 혹은 그저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가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분야 모두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활동의 방향과 접근법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는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 신뢰 관계를 쌓아야 했고 반대로 북한인권 분야는 북한 정권에 의해 피해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북한의 구조적 문

제를 밝히고 비판하는 태도를 보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두 분야는 각 분야의 초점이 달라 함께 협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가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많은 활동가가 개인 인터뷰에서 서로를 ‘만나보고 싶다’, ‘다른 분야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해주었지만, 각자의 활동이 너무 바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각 분야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가지는 공통적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속에 형성된 북한, 인권, 대북 인도적지원에 관한 고정된 이미지가 활동가들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과는 교류가 있어 쉽게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교류가 전혀 없던 대북 인도적지원 분야 활동가들은 섭외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신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 단체 이름에 들어가 있는 ‘북한인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연구에 참여해준 활동가 모두 정치적 이유로 활동가의 삶을 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분야에, 그리고 상대 분야에 따라오는 여러 정치적 선입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헌연구와 1:1인터뷰를 통해 궁금함을 해결해가며, 우리는 조금씩 처음 던진 질문의 답을 찾아간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데.. 우리 진짜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두 분야의 공통점보다는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전체 인터뷰 당일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모임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서로 처음 만나는 활동가들이 온

라인에서 얼마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각자의 생각이 화면 너머까지 잘 전달될까?', '괜히 어색한 침묵만 맴돌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전체 인터뷰 시간은 서로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자신이 가졌던 선입견을 솔직히 나누기도 하면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던진 '우리가 과연 함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도 모두 사뭇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셨습니다. 각자 활동하는 분야도, 각자가 그리는 미래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조금씩은 달랐지만, 우리가 모두 서로의 차이를 넘어 소통하고 연대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넓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면서 우리끼리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실무자들끼리 서로 상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또 응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또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초기에 계획했던 '각 분야 활동가가 서로를 이해하는 장을 만들기', '함께 협력의 방안을 고민해보기'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함께 협력하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두 분야가 각자의 길을 걸어온 시간만큼 더욱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번 연구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의 다름을 마주하고 같음을 발견하는 만남을 이어간다면 결국 두 분야가 발걸음을 맞춰 함께 걸어갈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먼저, 이미 시작한 작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연구에 함께해주신 많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서울시NPO지원센터 김지민, 박효인 매니저님, 연구설계에 도움을 주신 김소연 박사님, 멋진 디자인을 해주신 한지연, 원다솔 디자이너님, 항상 날카로운 피드백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덕수 부국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과 인터뷰) 하실래요?”라고 조심스레 건넨 말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활동가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뱃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을 꼭 만들겠습니다.

" 곧 찾아뵙게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

참고문헌

1. 학술지

- 김수진 (2018). SDGs 세부목표와 인권 연계 수준 분석. 국제개발협력(2), 109-170.
- 문경연, 이우영, 정소민 (2017). 대북지원 20년 (1995~ 2015):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성과와 과제. 국제관계연구, 22(1), 35-67.
- 문경연, 박지연, 송영훈 (2018). 대북지원 20년: 비판적 고찰을 통한 新대북지원 패러다임 모색. 국제관계연구, 23(1), 103-126.
- 서보혁 (2014). 진보진영은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창작과 비평. 42(1). 36-52.
- 양정훈 (2012). 통일을 향한 한반도 민족주의. 한국보훈논총. 11(4). 221-238. p.170.
- 이준태 (2015). 국내 북한 인권 NGO의 형성, 이념과 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사회학과
- 장은주 (2009).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북한 인권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철학적 토대의 모색과 관련하여. 사회와 철학. 17. 285-324.
- 전재호 (2015).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사적 의미-인권 및 반공 담론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33, 224-260.
- 정영철, 손호철 (2014). '보편적' 인권의 역사와 북한 인권 문제. 현대정치연구, 7(1), 259-283.
- 정지웅 (2004).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8(1), 221-238.
- 정천구 (2005). 제7장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통일전략, 5(2), 258-283.
- 조대엽, 홍성태. (2013). 대북지원의 정치경제와 인도주의의 딜레마. 민족문화연구, (59), 219-259.
- 히라타 류타로 (1998). 북한 농업실상과 농업 생산 통계의 문제. 농어촌진흥공사. 61.

2. 도서

- 국가인권위원회 (2007).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분석.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2015). '대북지원 20년 백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오경섭 (2021). 북한인권백서 2021.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통일연구원 (2008). UN 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서울: 통일연구원.
_____ (2017). 북한인권정책환경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허만호 (2014). 북한인권 이야기: 현안과 국제적 논의.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3. 언론보도 및 영상

- 경향신문 2012.09.18. ~ 2012.11.18. [기획연재] 북한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https://www.khan.co.kr/series/articles/af125>
- 국가인권위원회 2018.08.28. “세계인권선언의 탄생(45분)” <https://bit.ly/2YIZjDD>
- 뉴스1 2013.03.22. “유엔 인권이사회, 北 인권조사위 구성 결의안 채택” <https://bit.ly/3wIJoBU>
- 신동아 2007.11.06. “인권운동 37년 외길 윤현 아시아인권센터 이사장 ‘역사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돈다. 그러나 누군가 굴러야 돈다.’” <https://bit.ly/3n8BsGW>
- 연합뉴스 2016.03.02. “북한인권법 첫 발의 11년만에 본회의 통과...여야합의 처리”
<https://bit.ly/3wQkMY4>
- 중앙일보 2021.04.29. “‘탈북민에 경의’ 자유권 규약 지키나’美·UN함께 北 인권압박”
<https://bit.ly/3nbAv0B>
- YTN 2021.09.24. “북한 불응에도 ... 정부, 민간 대북지원사업에 100억원 지원키로 (종합)” <https://bit.ly/3DfsLA6>

4. 인권조약 문서 및 관련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연혁. <https://bit.ly/3FcyFTb>
외교부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국문). <https://bit.ly/3Cciaon>
외교부 국제연합 헌장(UN Charter). <https://bit.ly/3HmU4v4>
외교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협약(A규약). <https://bit.ly/3CczwBm>
외교부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https://bit.ly/3wKmZnz>
UN Treaty body Database. <https://bit.ly/3qxBv0W>

5. 북한인권 및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 홈페이지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http://www.kwafu.org/korean/index.php>
북한민주화네트워크. <http://www.nknet.org/index.php>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s://www.nkhr.or.kr/>
북한인권정보센터. <https://nkdb.org/>
피랍·탈북인권연대. http://www.chnk21.org/_main/
NAUH(나우). <https://nauh.or.kr/>
NK Watch(엔케이워치). <http://www.nkwatch.org/>
겨레하나. <https://www.krhana.org/>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https://kncck.modoo.at/>
샘복지재단. <http://www.samcare.org/?act=main>
어린이어깨동무. <https://www.okfriend.org/>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http://www.healthchild.org/new/>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http://ksm.or.kr/>
유진벨재단. <https://www.eugenebell.org:50008/>
하나누리. <http://www.hananuri.org/>
한국제이티에스. <http://www.jts.or.kr/>

2021 활력향연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펴냄 | 서울시NPO지원센터

발행 | 2021년 11월 26일

주소 | (04523)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2층

전화 | 02-734-1109

전송 | 02-734-1118

메일 | contact@snpo.kr

홈페이지 | www.snpo.kr



